

MB의 “북핵 위협” 협박에 굴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작년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누적된 분노의 불을 지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5월 29일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50여만 명의 시민들은 ‘노무현 추모’ 만이 아니라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쳤다.

한나라당은 “큰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라며 고립된 섬과 같은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6월 정국’은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비등점을 치고 폭발”(〈오마이뉴스〉)하는 “거리의 정치”(〈한겨레〉)가 시작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런 시기일수록 진보진영은 분노를 조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6월 10일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이하 6·10범국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6·10범국민대회를 위해 시민사회진보단체, 각계 원로, 네티즌까지 포괄하는 ‘6·10대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시청 광장을 봉쇄하고 대문 앞 시민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하는 가증스러운 이명박 정부에 맞서 광범한 세력들이 연대해 6월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는 국민회의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 그동안 국민회의가 “시민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촛불 집회를 주도하지 말자”며 운동 건설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것에 비춰보면 진일보다.

한편, 국민회의는 민주당과 공조를 중시하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물론 민주당이 민주적 권리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혁적 연사를 늘어놓을 때조차 한나라당과 공조를 위해 국민회의와 공조를 헌신짝처럼 버린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회의는 MB악법 저지 투쟁에서 민주당과 공조하는 것 못지 않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학생 등과 함께 민주적 권리 수호를 위한 운동을 건설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리의 정치”

한편, 민주노동당도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해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6월 11일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며 공장 점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시점에 민주노동당의 전국노동자대회는 6월 투쟁 전반에 중요한 분기령이 될 수 있다.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엄호하고 이명박의 민주적 권리 공격에 항의하는 시민사회진보단체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반노동자 정책에 맞선 광범한 저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의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만나야 한다.

진보진영은 6·10범국민대회와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가 광범한 연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6월 중순부터 시작될 MB악법에 맞선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부문의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기사 5면

최영준



5월 29일 시청 광장에 3만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사진 임수현

MB의 적대적 대북 대응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남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켜 정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하다. 심지어 남한 정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대북 정보를 공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이 미국 정부에서도 나올 정도다.

지난번 로켓 발사 이후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실험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진보적 활동가들을 ‘친북’ 혐의를 씌워 탄압하려 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직후 곧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가를 선언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에 북한은 곧

장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구축함·전투기 등을 전진배치하고, 북한군의 공격 지점에 대한 정밀폭격 훈련을 해 왔다.

그리고 북핵 실험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벌써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된 병커버스터 폭탄으로 유명한 GBU-28 수십 발을 구입하기로 했다. 병커버스터 폭탄은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로, 미국은 예전부터 핵 병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과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히 밝

혀 왔다.

그 결과는 끔찍하다. 미국 국립조사위원회(NRC)의 보고서를 보면 “영변 핵시설을 [핵] 병커버스터로 공격하면 사망자가 1백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GBU-28이 핵 탑재 병커버스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하 핵시설 파괴만으로도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핵우산’을 통한 전술핵 재배치와 미사일방어(MD)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군비증강을 자극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과 군비 증강은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불러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장차 재앙적 위험을 부를 것이다. ▶ 관련기사 3, 4면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종합

세상을 읽는 힘

“나는 후세인이 9.11에 관여했다
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
- 딕 체니의 실토

“[북한도] PSI에 가입해 함께 활
동하면 된다”
- 한나라당 대변인 윤상현의
단순무식한 해법

공성진: “우파 대통령이 죽었어도
좌파가 이렇게 애도해 줬겠느냐”
조윤선: “카메라가 있으니 말을
조심해서 하라”
- 구시렁거리는 한나라당 사람들

“물대포 맞으니 시원하다는 사람
도 있다”, “연행시키느라 버스에
태우니 MT’가는 기분이 난다는 사
람도 있다”, “똥등이로 맞으니 찜
질하는 기분 난다는 사람도 있다”
- ‘경찰 차벽이 아늑하다’는
주상용 말에 대한 네티즌들의 조롱

“A: Judging by the protests,
it doesn’ t seem like many
citizens like the president.
(시위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은 대통
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B: It might appear that way
but actually his approval
rating was quite high.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은 대통령
지지도는 상당히 높아.)”
- <동아일보> 생활영어. 애 쓴다

“대한문 앞이 촛불 ‘명소’ 가 됐다
... 화마에 휩싸인 승례문을 보며
온 국민이 발을 굴렀던 것이 불과
15개월 전 ... 어떤 경우에도 문화
재 보존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 <조선일보>의 아이 없는
촛불 반대 논리

“이런 문제가 고귀한 목숨을 포
기할 정도의 사안인지”
-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비웃는
노동부 장관 이영희

“이 대통령은 교회 장로, 친미주의
자, 정적을 정치적 타살, 북한을 자
극, 반정부 시위[를] 가혹하게 탄압
...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나 해
외로 망명 ... 비극적인 최후를 맞
게 됩니다. ...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현재까지는...”
- CBS 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용민

살인정권의 또다른 희생자

1백30일 넘게 장례도 못 치른 용산참사 희생자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이명박이 평범한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용산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5명의 철거민을 불태워 죽인
지 넉 달이 훌쩍 지나도록 이명
박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모든
추모제 불허, 유가족 활동가 구
속, 웹사이트 압수수색 등 탄압
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회견
도 못하게 막고 용산철거민참
사범국민대책위원회의 권영국
변호사와 유족까지 닥치는 대
로 연행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
고 3천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는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
기와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용
산경찰서장 등 살인진압 책임자
들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공개된 수사기록에도
“화재의 원인이 경찰 쪽에 있다
는 식으로 언론 보도도 있게 되
자 ... [원인이] 농성자 쪽에 있
다 진술했다”, “갑이 나서 ...
말을 바꾸게 된 것”(경찰특공대
제1제대장) 등 검찰의 주장과



전직 대통령 영결식이 있던 29일, 용산지역 기습 철거 과정에서 용역들에게 끌려나가는 문정현 신부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을 정도
니, 공개하지 않는 수사기록에
는 어떤 ‘진실’ 이 담겨 있을지
짐작이 간다.

법원에 진실 은폐 공범이다.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
개하라는 강제력 없는 ‘명령’
만 하고,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
한 압수영장 발부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
을 거부하는 변호인단 대신 국
선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을 강
행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신영
철만 ‘썩은 사과’ 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용역강제들도 전 국민의 시
선이 전직 대통령 영결식에 쏠
린 틈을 타 용산4구역에 대한

폭력적 강제 철거에 나섰다. 물
론 용역강제의 ‘절친’ 경찰은
그 뒤에서 철거를 비호했다.

가진 자들을 위한 ‘밥’ 과 이
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억누르
는 ‘원칙’ 이 바로 이명박이 입
만 열면 떠들어대는 ‘법과 원
칙’ 의 진짜 모습이다. 이 때문
에 장례를 못 치른 유가족들은

한 겨울부터 입기 시작한 상복
을 피약벌이 내리쬐는 6월까지
벗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 하에서
평범한 노동자 · 서민의 삶은
“정말이지 너무 억울해 파를 토
하고 죽을 지경”(문정현 신부)
이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희망 없는 ‘희망근로 2009’

지난 5월 정부는 ‘희망근로 2009’ 사
업을 지하철 광고를 비롯해 거리 현수막
과 포스터, 집집마다 발송된 홍보물 등을
통해 요란하게 홍보했다.

정부는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선
전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 일자리 창출 정
책의 한심한 실체를 여실히 보여 준다.

희망근로 사업에 지원해서 선발된 일
부의 사람들은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식
비를 포함해 최대 89만 원밖에 받지 못
한다. 그 일조차 6월부터 11월까지 다섯
달 동안만 할 수 있다.

임금의 30퍼센트는 “희망근로 상품
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을 쓰면서 자
신의 빈곤한 형편을 남들에게 계속 알려
야 하는 셈이다.

MB 복지의 한심한 실체

더구나 이 상품권으로는 대형마트나 인
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없고, 가

입돼 있는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 가맹
점에서만 쓸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상품권에는 백
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에도 없는
3개월 유효기간도 있다!

“희망근로”로는 학기당 5백만 원에 육
박하는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없다.
대학들이 상품권으로 등록금을 받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이명박은 어린이날 소년 소녀 가장 어
린이들을 모아 놓고 “공부에 시달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차피 등록
금을 마련하지 못할 테니 정말 그 아이들
은 공부에 시달릴 필요조차 없을 것 같
다.

“희망근로 2009” 사업에는 희망이 없
다. 노력할 희망조차 남겨 주지 않는 것
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좌절하지 않
게 하는 방식이다.

승영

“학살 지원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

[편집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2월 27일부터 구
속·수감된 김영익 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신
념을 밝히는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판사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전쟁에서 적을 안 죽
이면 어찌냐?”, “그런 사회는 유토피아 아니
냐?”며 방해했지만 굽히지 않고 진술을 계속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한국 사회에 살면서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나도 이 말을 믿었고 제 아버님도 해병대
출신에 전우회 회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
다.

그런데 중학교 때 한 시사 주간지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소식
을 접하면서 제 이런 믿음에 균열이 생기
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 군대가 또 다른 모
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군대가 우리 모두를 위

한 조직이 맞는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
다. 특히 2003년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
될 때, 무고한 어린이와 민간인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 희생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
었습니다.

팔루자 학살을 자행한 쿠르드 민병대를
한국군이 훈련시켰다는 것을 보고 이런 생
각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 한 몸 던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말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람 편에 서라는 의미
로 ‘영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
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요
원해졌습니다. 올해에도 1천 명이 감옥행
을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됐다면
1천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젠 낭비입니다.

1년 만에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든 MB정부

지난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소득분
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0.32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
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식
통계로도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로 들
어선 것이다.

더구나 1인 가구나 농가를 제외한 통
계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득 불평등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
향>에서도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하위
2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74만 2천 원
에서 91만 원으로 고작 16만 8천 원이
증가한 반면, 상위 20퍼센트는 5백37만
2천 원에서 7백1만 5천 원으로 1백64만
3천 원이 증가했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기인한 빈익빈 부
익부는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서 더욱 심화할 것이 분명하다.

잔인한 불평등

이명박은 부자 감세, 비정규직 확대, 대
량해고 등을 추진해 빈부격차를 더 늘리
고 있다.

재벌 · 강부자들은 지금도 제 배 불
리기에 여념이 없다. 함께하는시민행
동이 발표한 <경영진과 종업원 보수>를
보면 30대 기업 사내이사 평균 보수는
10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6곱절, 비정규직 노동자의 63.7곱절
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사내이사는 1백33억
원(2007년)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노동

자 평균 임금의 4백86곱절이나 된다. 이
런 자들이 ‘고통분담’을 운운하며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자고 떠들어 온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
금을 5.8퍼센트 삭감하자고 한다. 현행
최저임금도 평균 임금의 36퍼센트 수준
으로 형편없이 낮은데, 더 깎자는 것이
다.

최저임금을 29퍼센트 인상하자는 민
주노총의 요구는 정말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다.

재벌과 강부자들이 그동안 노동자들
에게서 갈취해 온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
를 재분배해 잔인한 불평등을 바로잡아
야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플라주 ③



일루전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미국·일본·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미국은 핵에 관해서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적용해 왔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핵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대표적 친미국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으로 끌어들이려는 인도의 2006년 핵실험도 용인해 줬다.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백인 우월주의 정부 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아프리카 개입의 통로로 삼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은밀히 지원해 왔다. 그러다 인종차별 반대 투쟁의 결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1992년 남아공 핵무기를 해체했다. 최근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핵무기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호들갑이지만, 정작 파키스탄 정부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하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핵무기 제조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갈 경우 북한에 책임을 물겠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그 ‘잘못된 손’은 미국 자신이다. 미국은 실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다.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결과 20여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추가로 방사능에 피폭됐다.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은 1만 기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위해 핵실험만 1천 회 이상 진행한 핵 초강대국이 됐다. 그 대가로 냉전 기간에 전 세계 민중은 미국과 소련의 핵·미사일이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미국은 핵확산이 진정한 문제라며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NPT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의 핵은 문제 삼지 않는 ‘핵독점권 보장 조약’이다. 이런 이중 잣대 때문에 NPT 체제는 프랑스·중국 등의 핵보유 추진을 막지 못했다.

그 이후 미국은 NPT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겠다고 1996년 5대 핵강대국들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게 했지만, 정작 미국 자신은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1997년부터 2006년 2월까지 네바다주 사막에서만 22차례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앞장서서 조약을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야말로 핵확산 주범이다.

독자적 핵무장

지금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며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협상은 감축한 핵무기 폐기 여부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2030년까지 감축 핵무기를 대체할 신형 핵무기를 도입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핵무기 없인 못 사는 ‘핵무기 중독 국가’인 것이다.

미국만 위선적인 게 아니다. 일본 우파들은 북한 ‘위협’이 불거질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자적 핵무장 명분 쌓기에 주력해 왔다. 일본은 이미 수천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과 기술을 준비해 두고 있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버금가는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

남한도 위선적이긴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도입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남한이었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3년 만인 1956년 정전협정 조항을 어기고



미국의 핵우산 개념도 '핵확산 주범'이자 한반도 긴장의 근원인 미국이 북한 핵을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위선이다.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했고, 1992년까지 핵무기 배치 사실을 숨겼다.

독자적 핵무장 추진 또한 남한이 북한보다 20년이나 빨랐다. 남한은 이미 1972년경부터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했는데,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와 미중 수교 가능성을 접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자 미국 몰래 이를 추진했다. 결국 미국의 반대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중단했다고 했지만, 박정희는 이미 1978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중인 핵개발이 95퍼센트 진전됐다는 보고를 받았다.”(1993년 전 보안사령관 강창성의 국정감사 증언)

남한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샀다. 2004년 IAEA 사찰 과정에서 남한은 이미 1982년에 플루토늄 추출과 금속 우라늄 제산에 성공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2000년 초 핵무기 제조 핵심 기술인 농축 우라늄 추출 실험을 비밀리에 성공했다는 것도 밝혀졌다.(당시 정부는 그 실험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별 과학자들의 소행이라고 발뺌했다.)

이번 북한 핵실험 정국에서 한나라당·자유선진당 내 일부 우파 정치인들은 ‘핵주권’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 우파들은 이참에 핵 재처리 권리라도 확보하기 위해 ‘핵주기 완성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핵 재처리는 평화적으로 이뤄지므로 ‘핵주권론’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핵주기 완성론’이 북한 핵실험 직후 제기된 것만 봐도 이 주장이 평화적 용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명백하다. 남한은 이미 핵무장 잠재력이 매우 큰 위험한 나라다. 남한은 세계 5~6위의 핵발전 국가로서, 재처리를 통해 3천여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전력도 있다.

일본과 남한 우파들이 북한 핵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핵개발 야심을 실행에 옮길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

미국은 중동에 발목이 잡혀 있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려 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해결책은 제재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재 수위는 낮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나 또한 북한 핵실험이 일본과 남한 등의 핵 도미노를 부추기고 한반도 주변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난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공격이 아닌 경제제재라고 해서 ‘평화적’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경제제재는 경제난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에게 더욱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제재 시도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의 권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다.

가령 후세인 치하 이라크에 대한 UN의 13년간 경제제재는 평범한 이라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파괴

했다. 그 결과 1백만 명 이상이 죽고 그중 어린이가 50만 명이나 된다. 반면 후세인은 자신의 실정을 미국 탓으로 돌리거나, 미국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평범한 이라크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렇듯 경제제재는 권력자들보다 평범한 주민들에게 훨씬 커다란 고통을 가하고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제약한다.

대북 제재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며, 북한 정권이 억압을 강화할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북한 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북한 핵은 동아시아의 민중에게 실질적 위협이므로 북한 핵개발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북한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대국들의 위선을 비난하고 제재와 강경 대응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북한 핵보다 강대국들의 핵과 제국주의적 압박이 평화를 해치는 훨씬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진보신당 등처럼 북한에 대한 비난에 더 치중하다 보면, 북한 핵을 빌미로 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개입 강화나 이명박 정부의 군비 증강과 반정부 활동가 탄압에 힘 있게 맞서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물론 일부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처럼 북한 핵개발을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자위권”으로만 여겨 무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됐다. 북한 핵개발이 추구하는 “자위권”은 동아시아에서 끔찍한 핵경쟁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 민중의 공포를 담보

로 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 핵이 항구적인 “자위력”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현재까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전선에서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열강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치를 전쟁의 대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국주의 체제의 논리

그러나 체제의 위기가 더욱 극심해져 강대국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면, 미국은 위협을 무릅쓰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들과의 첨예한 갈등도 불사하려는 미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작 몇 개의 핵무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의존하는 것

보다 미국이 현재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패배해 개입력이 약해지도록 아래로부터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여기다 보면, 진보진영은 아래로부터 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기껏해야 ‘선군정치’의 부차적인 보조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 관료들처럼 반드시 군비 경쟁이라는 제국주의 체제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그런 논리를 따라 북한 주민들이 만들어 낸 부의 상당 부분을 군비 경쟁에 쏟아 부은 대가로 오늘날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은 극심한 곤궁에 처하게 됐다.

진보진영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핵을 빌미로 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개입과 이명박 정부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담대한 희망”은 있는가?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당신이 주먹을 펴면 우리도 손을 내밀 것이다.”

오바마가 취임사에서 ‘깡패국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그는 부시가 만들어 놓은 재앙들을 치유하고 상처투성이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희망을 주는 듯했다.

한반도는 그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곳 가운데 하나였고, 그런 만큼 오바마에게 기대를 건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오바마 취임 불과 넉달여 만에 지금 우리는 ‘워치콘2’라는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오바마는 주먹을 펴려고 하는 폭압 정권들에 열린 문을 제공했[으나]” 북한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북한 탓으로 돌렸다.

과연 그런가? 물론 진정한 사회주의 자라면 핵무기를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핵 확산 문제로 말하면 최대 책임자·범죄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다. 게다가 지난 몇 달 간의 진실은 오바마가 북한이 잡을 그 어떤 기회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상대에게 주먹을 펴라고 말했을 뿐, 자신은 결코 주먹을 펴지 않았다.

자신의 전임자(부시)가 상대 국가를 근거도 없이 “악의 축”으로 몰고,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그 국가 지도자(김정일)에게 “피그미”라는 인종주의적 폭언을 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는 한 무더기의 제재를 부과하고, 마지못해 맺은 약속들마저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후임자는 과연 어떻게 출발해야 했을까?

2차 북한 핵실험은 오바마 외교의 실패

오바마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게 비교적 명백했지만, 그는 결코 이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술한 대북 제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풀어주지 않았고, 휴지조각이 된 약속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되살리려 노력하지 않았다. 2·13합의는 지난해 말에 미국이 검증 요구를 세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미군들(좌), 오바마(우) 키 리졸브 훈련 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와 부시는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로 들고 나오면서 파탄에 빠졌는데, 오바마는 이런 무리한 요구도 거둬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는 그의 전임자들이 반세기가 넘게 유지해 온 경제 제재와 군사 위협의 연장선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첫 조처는 키 리졸브 훈련 강행(3월)이었고, 두 번째 조처는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북한 3개 기업에 제재를 추가(4월)한 것이었다.

이 두 조처는 새로운 외교·협상을 약속하고 집권한 오바마의 진정성을 북한이 따져보는 중요한 계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마침내 오바마 정부의 100일 간의 정책 동향을 본 결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선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나왔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직후에 내가 이 신문(3호)에 썼듯이, “[제재]시도는 추가적 핵 또는 미사일 실험 등을 불러 사태를 한층 악화시킬” 게 뻔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내고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3개 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자,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라며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그런데도 오바마는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1차 북한 핵실험이 “부시 외교의 실패”라면, 2차 북한 핵실험은 오롯이 오바마 외교의 실패라고 부를 만하다.

어떤 사람들은 오바마가 북한과 대화하려는 입장은 분명하나 아직 대북정책 라인업이 완성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한다. 미국의 개혁 성향 북한전문가인 존 페퍼가 지적하듯이, 오바마판 “악의적 무시”에는 북한이 미국 대외정책의 후순

위라는 점,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의 미 해결 쟁점을 해결할 새로운 대북 전략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긴장은 오바마 정부가 단지 갈피를 못 잡아서가 아니라, (대북정책 라인업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서도) 제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증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부보좌관 데니스 맥도너,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수전 라이스,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자신이 제재를 추진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자들이다.

대화하자면서 제재를 가하는 오바마의 외교가 북한에 대해서만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는 이란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동시에 경제 제재를 연장했는데, 그 결과 최근 이란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핵관련 회담도 거부했다.

지난 몇 달 간의 진실은 오바마가 북한이 잡을 그 어떤 기회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상대에게 주먹을 펴라고 말했을 뿐, 자신은 결코 주먹을 펴지 않았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제재 중단해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핵 강대국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구상의 핵무기 3만 개를 나눠 갖고 있는 핵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위선이 역겹다.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과 비슷한 위력의 핵무기를 미국은 60여 년 전에 히로시마(15킬로톤)와 나가사키(22킬로톤) 시민들의 머리 위에 투하했다. 얼마 뒤에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지금도 미국 핵무기는 한반도 주변 어딘가에서 평양을 겨냥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감축에 대해 얘기해 기대를 모았다. 그래서 오바마의 북한 핵실험 비난은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위선이 아니라 일관된 의지로 보일 지경이다.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은 비핵 국가의 핵 확산 방지이지 핵 보유국의 핵 폐기가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핵 감축은 고려 대상도 아니다. 특히 이 프라하 연설에서는 이스라엘 문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변함없는 이중 잣대를 보여 줬다.

2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위협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가 2차 핵실험이라는 역효과를 냈다는 게 명백한데도, 2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제재와 압박으로 흐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독자 제재도 검토 중이다. 오바마 정부는 2차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군사적 응징을 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 주한미군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데려가도 부족할 판이다 —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듯하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 수위는 북한만 고려해 결정될 수도 없다. 2차 북한 핵실험 직후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에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강경한 행동을 요구했다.

현재 오바마 정부가 고려하는 독자 제재 방안은 하나같이 과거에 북미관계를 심각한 대결로 몰고갔던 것들이다. 예를 들어 금융 제재가 그렇다. 부시가 BDA(방코델타아시아)를 돈세탁 우려 대

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했을 때 북한은 몇 달 간의 실랑이 끝에 2006년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부시 시절에 유일하게 완료된 제재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부시의 대표적 일방주의 정책인 PSI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 이르면, 오바마의 ‘부시화’라고 밖에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기류에 편승하고 2차 북한 핵실험을 이용해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바라는 PSI 참가 결정을 강행했다. 북한은 선박을 수색당하면 군사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10년 새 두 차례나 해상 교전을 벌인 남북한에게 3차 해상 교전은 결코 회박한 가능성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 공언하고 있는 제재가 실행된다면 북한은 ICBM 실험은 물론 소형 핵탄두 제조, 핵 재처리 시설 복구, 흑연 감속로 공사 재개 등을 진척시

켜 핵 능력을 더 강화하려 할 것이다.

엮히고설켜 커지는 판돈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 정부는 모두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군사적 또는 국내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

일본 정부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고 과잉 반응하며 북한 핵실험을 일본 재무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은 너무 잘 알려진 일이다.

최근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동아시아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외교적 해결이 실패하면 “MD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앞서 언급된 프라하 연설에서도 “이란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MD를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며 이란을 이용해 논란에 휘말려 있는 유럽 MD를 정당화한 바 있다.

로버트 게이츠의 MD 언급에 때맞춰 미국은 괌 기지에 이어 오키나와 기지에도 F22랩터 전투기 12대를 추가 배치해 지역 긴장을 증대시키고 있다. F22랩터 전투기는 30분 내에 연병 핵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1시간 내에 북한 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 전 국방장관 월리엄 페리는 고압적인 일련의 행동은 결국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4년 한반도 긴장이 북한 핵시설 폭격 일보 직전까지 치달게 했던 장본인으로서 그는 동북아지역에서 엮히고설켜 조금씩 커져가는 판돈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일본·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와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군사력 강화 계획에 반대하는 광범한 저항운동 건설만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다. 오바마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에 희망을 줄 수 없다. 그 정반대가 참이다.

종합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5백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추모 물결 밀바다에는 반이명박 정서가 깔려 있었다. (조선일보)조차 추모 열기 속에 담겨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불만, 비판의 뜻”을 헤아리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급락해(18.7퍼센트) 민주당보다도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보선 이후 심해지던 우파 내 분열도 가속하고 있다. ‘자살’을 왜 서거라고 하나며 열을 올리던 조갑제는 이명박더러 “목숨을 걸 용기가 나지 않으면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지금은 이 정권이 온전히 가느냐, 아니냐의 상황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채신위는 이명박 대신 님이라도 잡겠다는 식으로 박희태 사퇴를 요구했다. 박희태 측은 “노무현 서거랑 박희태 대표랑 무슨 관계냐”며 반발했다.

북거일은 이명박에게 박근혜와 화해하라고 주문했지만 박근혜는 이명박과 동반 추락하느니 조용히 기다렸다가 주도권을 넘겨 받겠다는 심사다.

이런 분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미국 경제가 한 번 더 심각하게 추락하고 한국 경제도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명박은 지배계급 내에서조차 용도 폐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은 더한층 탄압을 강화하고 MB악법을 밀어붙여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파렴치하고 잔인한 정권은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청 광장을 봉쇄하고 추모객과 시위대를 폭행하고 연행했다.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는 추모객들 앞에서 전투경찰 수백 명이 덕수궁 앞 분향소를 짓밟고 부숴버렸다. 영결식이 끝난 자리에는 명박상선만 남았고 이명박 정부와 평범한 노동자·서민 사이의 골은 한없이 깊어졌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탄압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했고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우리가 대도를 가는 이상 막을 사람은 없다”며



5월 29일 시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진 이윤선

몰려서지 않을 태세다.

일주일 만에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을 연 이명박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뜨거운 분노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어

언론 악법, 비정규법, 마스크법 등 MB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버리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반발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민주주의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적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투쟁과 쌍용차·화물연대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된다면 이명박의 이런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진보진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한층 더 뜨거워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진보진영의 6월 투쟁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야4당이 6월 10일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광범하다. 서울대 교수 1백여 명과 중앙대 교수 67명이 정부 비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이 절정에 오른 지금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뿐 아니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포함시킨 광범한 공동행동이 계획된 것은 좋은 일이다.

6·10 범국민대회는 이런 대중 정서의 초점 구실을 할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자유주의 부르주아 야당이 포함된 민주헌법 정치 국민운동본부(국본)가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면서 계급적 한계를 드러내기 전까진 그런 정치적 상징 구실을 했다.

물론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반민주적 탄압을 비판하면서도 종종 불철저하고 동요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극도로 소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우파의 압력보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더 두려워 해 갈등이 첨예해질 때마다 우파들과 타협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의 일관성 없음과 불철저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했듯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진정한 동력은 노동자 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다.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에 노동자들이 열의 있게 참가함으로써 이 투쟁이 경제 위기 고통선거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6월 10일 행동은 6월에 벌어질 노동자 투쟁과 MB악법 국회 통과 저지 투쟁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이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판결

촛불 참가자는 처벌하고 이진희의 비리는 눈감아 준 사법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5월 29일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진희 전 회장에게 1·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인정해 준 것이다. 촛불 시위 참가자 처벌을 위해서는 부당한 외압도 서슴지 않던 신영철이 포함된 대법원이 삼성의 불법은 눈감아 준 것이다. 이것이 ‘MB식 법치’다.

결국 이재용은 겨우 61억 원을 이용해 연간 매출 2백조 원의 삼성그룹을 삼키면서 고작 16억 원만을 증여세로 냈을 뿐이다.

이진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일부 언론들은 “절세형 상속”의 길이 열렸다고 반색했다. 자본가들은 “어려운 경제의 활성화와 삼성 그룹의 글로벌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국내 기업의 경

영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해소하는 계기”(한국경영자총협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삼성 편들기는 이미 대선 때부터 예견됐다. 이명박 대선 캠프에는 삼성증권 사장 출신 황영기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출신인 지승림이 재벌천국을 위해 일했다.

‘암적 존재’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공화국’ 만들기에는 딱값 검찰도 발 벗고 나섰다. 검찰은 사건을 방지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겨 놓고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 이사만 기소했다. “불법과 폭력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16일 대전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32명에 대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삼성

이 짜놓은 더러운 부패와 비리의 그물망에 이 사회 지배층이 얼마나 촘촘히 엮여 있는지 확인시켜 줬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이진희는 수조 원에 이르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 고위 법관들, 언론사 간부들, 국세청과 재경부 관리들에게 돈을 줬다. 이들은 철저하게 삼성을 위해 봉사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반에 걸쳐 있는 삼성의 불법·비리 그물망은 이미 2005년에도 그 실체를 언뜻 드러낸 바 있다. 이상호 MBC 기자는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 이른바 ‘삼성 X 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검은 연결고리를 폭로했다.

삼성은 이미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뇌물을 고리로 정부와 유착했다. 이병철의 삼성은 박정희 정권의 사금고 노릇을 하며 사카린 불법 밀수를 벌였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에도 각각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바쳤다. 정부는 장단을

김용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진희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 고위 법관들, 언론사 간부들, 국세청과 재경부 관리들에게 돈을 줬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삼성을 위해 봉사했다.

맞춰 삼성의 탈세, 불법 세습, 무노조 경영을 눈감아 주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비리와 부패로 쌓아 올린 부로 이진희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1백20억 원짜리 저택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삼성의 부를 만들어 온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한 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삼성의 노동자들이 이아말로 자신들을 쥐어짖 돈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의 범죄를 고발한 삼성 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암적 존재’인 삼성의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싸움은 쉽지가 않고 있다. 삼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진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막아선 고려대 학생들(필자 자신도 포함된)은 출교당했지만 투쟁 끝에 승리해 학교로 돌아갔다. 2005년과 2007년 삼성의 비리에 맞선 운동은 이 운동이 지닌 잠재력을 보여 줬다. ‘재벌천국’을 만들고 있는 이명박과 그가 비호하는 삼성에 맞선 투쟁이 맞물려 벌어져야 한다.

김지윤 기자 | dejune@left21.com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이명박 정부가 도둑처럼 몰래 파병을 모의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인 학살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5월 4일 미군의 오폭으로 1백여 명의 여성과 어린 아이를 포함해 1백5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파키스탄으로 확대되면서 전쟁의 판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는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쟁자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위기에 처하자 “한미동맹은 ‘혈맹’”이고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패권 전쟁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레바논 파병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의 ‘오바마의 전쟁’ 지원 계획에서 핵심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원래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사령관 월터 샤프는 “한국이 비용을 지원할지, 병력을 지원할지, 장비만 지원할지, 아니면 전부 다 지원할지 등 여러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미군뿐만 아니라 나토군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파병을 고려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게이츠의 말대로 “아프간에서의 실패는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아프팍’ 전쟁에서 패배하면 앞으로 약소국을 상대로 군사적 모험을 벌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이 아프팍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도 더 나은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아프간 파병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한국 반전 운동의 구실이 중요하다.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 간사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이명박 정부가 몰래 파병을 모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들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반전평화연대(준)가 결성되다

5월 21일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경제를넘어, 보건의료단체연합,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 21개 단체가 참가한 새로운 반전연대체인 반전평화연대(준)가 결성됐다.

그동안 반전평화 단체들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과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에 반대해 반전 운동을 벌였다. 또,

올해 초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에 항의해 반전 운동을 펼쳤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이런 반전 운동의 성과를 계승해 향후 반전 운동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반전평화연대(준)는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한반도 평**

화를 3대 핵심 의제로 삼아 대중적 반전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올해 주요 의제로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 파키스탄으로 확전 반대,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포함한 점령 지원 반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상시 파병법(PKO법) 제정 반대를 결정했다. 전쟁광들에 맞서 반전 운동이 승리

하려면 광범한 단결과 연대가 중요하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의제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에 개방된 연대체이다. 전쟁광들에 맞서 반전 운동을 벌여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할 단체와 개인들이 반전평화연대(준)에 가입(문의 2009antiwar@gmail.com)해 함께 반전 운동을 벌여 나가자.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 간사

‘아프팍’ 전쟁은 미국에게 “베트남보다 훨씬 어려운” 전쟁

군사력에 의존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안정’ 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전략은 부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 미국과 북부동맹, 파키스탄, 탈레반이 협상한 결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떠나 돌아간 지역이 바로 북서변경주와 와지리스탄이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국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지역으로 국경 개념이 거의 없다. 그래서 탈레반은 이곳을 거점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넘나들며 미군과 게릴라전을 벌였다. 지형도 험난해 미군의 추격을 피해 숨기에도 제격이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게 전달되는 음식·연료·무기의 80퍼센트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이 지역을 확실히 통제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무인폭격기를 동원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다. 파키스탄 정부도 압력을 받아 군사작전에 나섰다. 무고한 파슈툰족 민간인들이 죽고 다치고 난민이 됐다. 이에 반발해 이 지역의 많은 파슈툰족들이 탈레반과

함께 저항에 나섰다.

파키스탄군의 상당수는 탈레반과 같은 파슈툰족 출신이다. 또 역사적으로 탈레반이 성장하는 과정에 파키스탄군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 더구나 전면전을 펼치려면 인도와 접경한 카슈미르 지역 군대를 끌어와야 한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무사라프 정부는 제한적으로만 이 지역에 군대를 투입했다.

그러나 북서변경주와 와지리스탄 지역에서 민간인 살상이 계속되면서 군사독재자 무사라프의 정치 위기가 심화했고 결국 그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파키스탄의 새로운 대통령 자르다리는 미국과 파키스탄 대중의 압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지난 4월 중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북서변경주 스와트 계곡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노발대발하며 파키스탄을 비난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 등 극단주의 세력과의 전투를 포기하고 있다.” 또 현재 IMF 구

제금융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에 막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며 북서변경주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도록 종용했다.

자르다리 정부는 탈레반과 맺은 평화협정을 깨고 4월 말부터 북서변경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아프팍(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 리처드 홀브룩이 인정했듯이,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베트남보다 훨씬 어려운” 전쟁이다.

파키스탄으로 확대된 전쟁은 이 지역의 불안정을 더 부추기고 있다. 애당초 정치적 동질성이 높지 않았던 북서변경주 등 지역들이 분리·독립하거나 군사쿠테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북서변경주에서만 2백만 명이 난민이 됐고 난민캠프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점령 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은 파괴됐다. 점령군의 ‘물지마’ 폭격으로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됐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평균수명

미국은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결국 참다 못한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다시 저항에 나섰고, 탈레반이 그 구심으로 다시 떠올랐다.**

도 남성 41세, 여성 42세로 줄었다. 대마초 재배는 오히려 늘어나 전 세계 대마초의 90퍼센트 이상을 생산하는 아편의 천국이 됐다. 탈레반 아래서 신음하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카르자이와 지방 군벌들 아래서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 성매매는 전보다 더 늘었다. 미국은 재건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고 그나마 지급된 재건 자금도 부패한 서방 NGO와 정부 관리들의 주머니만 채웠다. 치안 부재 상

황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미국은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결국 참다 못한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다시 저항에 나섰고, 탈레반이 그 구심으로 다시 떠올랐다. 이른바 ‘신 탈레반’의 부상은 끔찍한 점령의 산물이었다.

한편, 미국이 간신히 가라앉힌 이라크의 불안정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점령 초기 종파 갈등을 부추겨 저항세력을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더 극심해졌다. 결국 2007년 이후 협상 전략을 추진한 미국은 시아파 정부, 시아파 저항세력, 수니파 저항세력 등 적대적인 세력들 간 일시적 휴전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이들 사이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싸움의 판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선 모두에서 패배를 겪고 심지어 파키스탄까지 잃게 되는 총체적 난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세계경제 위기

GM 파산과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또 하나 파산하다

이 기사는 미국의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글을 김용욱 기자가 번역한 것이다.

GM의 파산과 국유화는 미국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즉 ‘아메리칸 드림’을 약속한다고 말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났음을, 오히려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GM은 한때 자동차 산업의 최강자였고 미국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지배와 동의어였다. 이제 GM은 미국 자본주의 몰락의 상징이다.

AIG에서 GM까지, 미국 자본가들의 단기 이윤에 대한 집착과 자유 시장에 대한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 이런 파국적 상황의 주원인이다.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기 전부터 시작된 경기 후퇴로 이미 미국 노동자 수백만 명의 삶은 산산조각났다.

노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정제하거나 하라한 임금을 부채를 늘려 메워왔다. 금융 위기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계 자산 수백억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실업률은 오르고 임금은 깎이고 교육과 보전에 대한 공공 지출은 삭감됐다. 크라이슬러와 GM의 파산은 이 경향을 더 부추길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우익 의원들과 보수적 논평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에게는, 연방 정부가 GM의 자본 60퍼센트를 인수한 것이 오바마의 ‘사회주의’를 더 분명히 입증하는 증거일 뿐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리처드 셀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미국 정부]가 한 일은 ... 사회주의,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개입이다. ... 나는 저들이 충분히 비용을 줄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더 많이 양보하지 않았다.”

물론 셀비는 알라바마 주정부가 BMW, 혼다, 도요타 등 자동차 기업들이 자신의 지역구인 알라바마에 공장을 짓게 하려고 5억 3천만 달러의 감세 혜택을 베푸는 방식으로 정부 돈을 사용했을 때 적극 환영했다. 그 기업들에는 당연히 노조도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사설의 논조도 비슷하다. “정부와 GM의 합의는 몇몇 작업 규칙과 업무 내용을 단순화하면서도 고용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 연금, 건강보험 급여 등은 전혀 줄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불평은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으로 GM이 UAW에 빚졌던 2백억 달러를 탕감해준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UAW 건강보험기금은 GM 주식의 17.5퍼센트를 소유하게 될 텐데, 이 주식의 가치가 퇴직자 건강보험을 지불할 만큼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아트가 인수한 크라이슬러의 경우, UAW 건강보험기금이 크라이슬러 주식 55퍼센트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퇴직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낮추라는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UAW는 크라이슬러와 GM에게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체협상은 중재로 대체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익 떠버리들의 불평과 달리 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그들의 공동체가 고통을 강요받는다. GM 공장 14개가 문을 닫으면서, GM의 UAW 조합원은 6만 4천 명에서 4만 명으로 줄 것이다. 1970년대 말 GM의 UAW 조합원은 무려 45만 명이었다.

좀더 나은 급여를 받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은퇴하면서, 그 자리는 현재 시간당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인 28달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신참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몇 년 전 UAW가 단체협상에서 타협한 결과다.

한때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섰던 UAW가 이제 ‘주식회사 미국’과 손잡고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레이버 노트〉의 제인 슬로터의 말처럼, “지금부터 자동차 회사의 일자리는 또 하나의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일자리일 뿐이다.”



자동차 모터쇼 밖에서 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미국자동차노조 조합원 “‘부가 저절로 흘러넘쳐 노동자들에게 간다’는 말은 부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오줌 싸는 것에 다름 아니다”

GM 파산은 노동자 탓이 아니다

크라이슬러와 GM의 붕괴는 세 가지 위기가 결합돼 있음을 뜻한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팬찮은 보수를 받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제조업 일자리의 장기적 감소 추세 가속화, 미국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복지마저 과거로 후퇴하기.

이런 조건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지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삭감하기로 마음먹은 고용주들에게 방향을 제

시하는 식으로 경제 전반에 그 파장이 확산될 것이다.

물론, 우익들의 상상처럼 GM이 자동차 노동자들의 천국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GM이 잘나갈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GM은 조립라인 속도가 살인적이고, 작업 규율이 군대처럼 엄격하고,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하려는 사측의 시도가 집요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GM의 임금이 블루칼라 노동자 임금의 표준이 됐다면, 그것은 싸워서 그런 성과를 따낼 만큼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했던 적이 있을 줄 뿐이다.

지난 30년 동안 UAW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임금상승률은 사실상 물가인상률에 밀렸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는 의기양양하게 선언한다. “UAW가 받아들인 양보안은 애초 부시 정부가 GM과 맺으려 했던 대출 계약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반노조 세

력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1930년대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경찰과 주 방위군에 맞서 싸웠던 출범 초기 UAW의 급진성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

언론 논평가들은 GM의 형편없는 경영과 어리석은 투자 결정들을 비난하면서도 GM의 문제가 “과도한 임금을 받아 온” 자동차 노동자들 탓이라고 집중포화를 퍼붓는다. GM 노동자들의 총임금은 GM 자동차 생산 비용의 10퍼센트도 안 되는데 말이다.

오바마의 월스트리트식 GM 파산 해법

미국 자동차 산업 위기는 오바마 정부가 공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 산업 개발 등 미국 경제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 플레이스’에서 옳게 지적했듯이,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려고 5백억 달러를 투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GM에서 2만 1천 개의 일자리를 없앨 계획이다. 라이시는 정부의 개입 논리가 주로 GM 파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중서부의 산업 쇠퇴를 막는 것이 목표라면, GM에 5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차라리 그 돈을 GM과 다른 사양 산업들을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

들, 예컨대, 경전차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물건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해고된 자동차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데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자동차 제조업체를 하루아침에 군수품 제조업체로 바꿨던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GM공장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곳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제 GM을 통제하게 된 오바마 대통령은 GM의 공장들을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추가 자금 3백억 달러를 자동차를 계속 생산하라고 주지 말라. 오히려, 그 돈을 현 GM 노동자와 이미 해고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그들이 21세기형 교통 체제를 건설하

는 것을 돕는 데 사용하라. 정부는 노동자들이 당장 작업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GM 파산을 UAW를 공격할 기회로 활용하고, 부채를 탕감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제거한 돈 잘 버는 ‘뉴GM’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좌파 언론인 로버트 와이즈먼은 이렇게 말한다. “오바마 정부의 GM/자동차 테스크 포스가 GM 파산과 구조조정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자동차 산업을 잘 모르는 월스트리트 출신으로 구성된,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밀스런 집단이다. 그들은 GM을 하나의 기업체로 영속시키려 한다.”

GM과 크라이슬러 파산 과정은 오바마의 월스트리트 친화적 경제 정책을 따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정부

가 파산한 기업들을 구제하거나 되살리고 나서, 그 자신은 민간 경영자들 뒤에 숨어 온갖 정치적 문제 — 주택 물수 문제, 은행 경영자들의 황당한 보수 문제, 자동차 생산 공장 폐쇄 문제 등 — 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위장된 국가자본주의 정책을 펴 왔다.

GM 파산은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강력하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은 이 기회를 이용해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고,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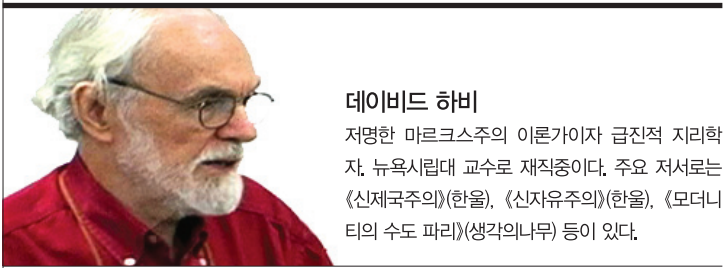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은행가들과 오바마 정부에 있는 그들의 하수인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자동차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데이비드 하비 인터뷰

자본의 논리를 탐구하기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데이비드 하비가 자본주의의 현 위기와 그의 칼 마르크스 자본론 온라인 독서 그룹 —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 — 에 대해 말한다.



데이비드 하비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급진적 지리학자, 뉴욕시립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신자유주의(한울)》, 《신자유주의(한울)》,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생각의나무) 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경제 위기의 근원이 금융 문제에 있었고 여기서 문제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된 거라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문제의 근원이 생산에 있었고, 그것이 금융 문제로 확산된 거라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이른바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사이에는 좀더 변증법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과잉생산’이라 부르는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생산보다 자산 가치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발생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과잉생산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가치 창출 기법의 개발처럼 헤지펀드 등의 투자가 능성을 만들어 낸 금융혁신도 있었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꽤 오랫동안 부자들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온갖 종류의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에 투자해 왔습니다. 부자들이 주택 시장, 주식 시장, 예술품 시장, 파생 상품 시장 등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이들의 가격은 더 올랐고, 더 많은 사람이 투기 활동에 몰려 들었습니다.

이들 시장은 모두 ponzi형 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에 금융 문제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부자들이 그런 길을 택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원인을 놓치는 것입니다.

과잉생산 위기를 언급했는데, 좀더 설명해 주십시오.

자본가들은 언제나 잉여상품을 생산합니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매년 3퍼센트씩 성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3퍼센트 성장 동력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자본이 노동(부족) 문제를 겪는다면, 상품을 팔기가 힘들 것이고,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시장에 문제가 있어도, 똑같은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과잉생산은 자본가가 노동 부족, 시장 [수요] 부족, 자원 부족, 기술 부족 등으로 확보한 잉여를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맥락에서 당신은 ‘공간적 해결’ (spatial fix) 같은 메커니즘들을 지적했습니다. 잉여자본이 국내 축적보다 해외에 투자되는 상황을 지칭한 말이지요. 당신은 금융 시스템의 발달이 또 다른 ‘해결’ 메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적 해결을 추구하려면 정교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970년대 이후로 자본주의가 공간적 해결을 추구할수록, 자금을 중국·인도·멕시코 등으로 이전시킬 국제 금융기관들의 구실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금융 체제는 부분적으로는 전 세계적 자본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금융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통화 파생 상품, 이자율 스왑프 등이 등장했습니다. 1990년만 해도 이들 시장의 규모는 보잘 것 없었지만, 2006년에 이르러 세계총생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체제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서도 파지고 있다.

산의 세 곁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신용의 폭발적 증가로 자본가들이 훨씬 쉽게 임금을 억제할 수 있었죠.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발생한 경제 위기는 복합적 측면이 있었지만, 한 가지 핵심적 측면은 노동의 힘이었고,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의 힘을 분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주 정책, 아웃소싱, 해외 이전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로널드 레이건, 마가렛 대처 등의 정치적 공격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1985년에 이르러면, 노동의 힘은 사실상 분쇄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제가 “임금 억압”이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질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시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금이 억제되면 총수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동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나눠 주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빚쟁이가 됐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미국에서 가계 부채가 세 곁절이나 상승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예컨대, 샌디에고의 은행이 지역 건설업체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주택 건설 자금을 빌

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주택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금융기관들이 노동계급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빌려 줄 ‘신용있는’ 노동계급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대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등장했던 것이죠.

금융기관들은 주택의 건설과 판매에 모두 관여해 왔습니다. 그들 덕분에 인구의 상당수가 심각한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더는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 거품은 문제들을 얼마나 감추는 효과도 있었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모두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에 3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주택이 4년 뒤에 50만 달러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사람이 그 주택을 팔면 수중에 20만 달러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기업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이런 현상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뛸 거라는 집단적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자산 거품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그랬죠. 나는 주택 시장이 2003년에 붕괴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진 않았죠. 나는 자뻑했습니다. 내가 그냥 미친 거였나? 2004년에도 붕괴하지 않았습니. 내가 계속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이르러 거품은 황당한 수준으로 확장됐습니다. 결국 나는 ‘우리가 다른 세계로 접어들었고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르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가 결국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지난해 인터뷰(2006년 2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발 대형 금융 위기가 폭발하기 두렵습니다.” 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2003년 《신세계주의》를, 2006년 《신자유주의》를 출간하면서 나는 미국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만약 미국이 어느 나라 같았다면 IMF가 방문했을 거라 지적했습니다. 만약 2003년에 위기가 발생했다라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 위기는 흥청망청 보낸 지난 6년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현 위기를 1997~1998년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같은 지역 위기와 비교해 보죠. 당시에 그 나라들은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 그러나 오늘날 도대체 물건을 팔 지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위기가 수년간 지속될 거라 생각에 20만 달러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기업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이런 현상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뛸 거라는 집단적 기대가 팽배하다면, 자산 거품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그랬죠. 나는 주택 시장이 2003년에 붕괴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진 않았죠. 나는 자뻑했습니다. 내가 그냥 미친 거였나? 2004년에도 붕괴하지 않았습니. 내가 계속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이르러 거품은 황당한 수준으로 확장됐습니다. 결국 나는 ‘우리가 다른 세계로 접어들었고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르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가 결국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되려는 생각이 조금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을 뒷받침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미국 재무부 채권 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3월 말 미국 중앙은행이 수조 달러를 시장에 풀자 달러 가치가 즉각 하락했습니다.

나는 중국이 달러 가치 하락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됩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사실, 최근 6개월 동안에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보다 처지가 낫습니다. 중국 은행 시스템은 미국처럼 타격을 입지 않았고, 활을할 잉여자금도 더 많습니다. 만약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과 협조한다면, 그리고 대만이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동아시아 경제 협력 지대가 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식의 동아시아 지역 은행 설립이 논의되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외부 공급자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대신에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에서 탈공업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년 사이에 생산관계가 재구성됐습니다. 생산 체제와 상품 공급망이 다양한 공간에 걸쳐 분산됐다고 해서, 그것이 끊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중국이 외부 공급자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대신에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에서 탈공업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년 사이에 생산관계가 재구성됐습니다. 생산 체제와 상품 공급망이 다양한 공간에 걸쳐 분산됐다고 해서, 그것이 끊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수조 달러의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중국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 달러가 하락하도록 내버려 두면 중국은 돈을 잃을 것입니다. 중국이 더 많이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잃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내부 펀드가 블랙스톤에게 최대 규모의 미국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할 돈이 상당한 손실할 수 없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국 달러화 처분 물결이 일어난다면 — 모두 두려워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논의하려 하지 않는 주제 — 엄청난 재앙일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등은 독자적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920년대와 1930년대 같은 지역 블록 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고 대단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생산의 세계적 성격 때문에 보호주의가 발전할 개연성이 1930년대보다 더 낮은가요?

어떤 생산 부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기가 심각해지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에서 탈공업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년 사이에 생산관계가 재구성됐습니다. 생산 체제와 상품 공급망이 다양한 공간에 걸쳐 분산됐다고 해서, 그것이 끊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생산 부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기가 심각해지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에서 탈공업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년 사이에 생산관계가 재구성됐습니다. 생산 체제와 상품 공급망이 다양한 공간에 걸쳐 분산됐다고 해서, 그것이 끊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수조 달러의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중국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 달러가 하락하도록 내버려 두면 중국은 돈을 잃을 것입니다. 중국이 더 많이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잃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내부 펀드가 블랙스톤에게 최대 규모의 미국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할 돈이 상당한 손실할 수 없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에 기초를 두고 자기만의 정치 사상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자본론》을 읽을 때 단지 1권만 꼼꼼히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전체 동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크스의 다양한 저작들 — 《자본론》 2권과 3권, 《잉여가치 학설사》,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등 — 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강에서 마르크스가 놓친 점도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의 연구 기획은 자본주의 동학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고전 정치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이자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저작들에서, 심지어는 《자본론》 1권에서도 이자와 신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의 집중과 화폐에 관한 장에서 말하죠, 여기에 내가 ‘국가-금융 관계’라고 부르는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의 수중으로 신용 수단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자본론》의 시초 축적에 관한 장에서 마르크스는 은행 지배, 국가 재정, 국가 부채의 등장을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지적합니다.

자본주의를 올바르게 분석하려면, 국가와 금융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것을 맨 뒤인 《자본론》 3권에 다뤘습니다. 화폐자본의 이보다 생산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본론》 1권만으로는 자본 축적과 순환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본의 한계》에서 이자·신용 등에 대한 마르크스의 파편적 논의를 모아 일관된 이론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많은 사람이 금융 자본에 대해 분석했고, 그에 대한 문헌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들은 보통 금융 시스템을 자본주의의 전체 동학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첫 질문에서 제기한 이분법도 그런 분석에서 나온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올지는 전적으로 계급 세력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정부의 위기 탈출 방식에 대한 일관된 계급적 반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

우리는 분노가 포퓰리즘의 형태로 분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정치 운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5년 뒤 더 큰 위기를 낳을 방식으로 위기에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는 일관된 형태의 운동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권력자들은 계급 권력의 근본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위기에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하다면 정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가 임명한 사람들을 보며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날렵게도, 많은 미국인이 우리 의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9년 4월호 번역 김용욱

불황, 호황, 그리고 기후변화



크리스 하먼 영국의 사회주의 이론 계간지 《인디펜던트 소셜리즘》 편집자

유럽연합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녹색 의제’를 중요시하겠다는 약속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황을 이용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에 한 형편없는 TV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대기에 온실가스가 조금씩 축적된 결과로 기후가 어느 순간 파괴적으로 돌변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경제 위기처럼 사람들을 뿔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카오스와 복잡계 이론 덕분에 최근에 와서야 시장 경제가 왜 갑자기 위기에 빠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부정확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적 이해 정도밖에는 수학 지식이 없었지만, 이미 1840년대에 그 이유를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경제 저작에서 자본가들의 미친 듯한 자본 축적 경쟁 — 이를 ‘자본의 자기 확장’이라 불렀다 — 이 위기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단지 자본주의가 불황에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체제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자본론》은 인류가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즉, 인간과 나머지 자연과의 신진대사 과정을 자본주의가 위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형태의 농업이 토지 산출력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런 통찰을 얻었다. 마르크스는 충분히 발전한 자본주의가 아직 세계의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고, 생태계 파괴가 불황이나 전쟁보다 덜 알려져 있을 때 이 같은 통찰을 제시했다. 마르크스가 죽은 뒤 거의 1백 년 이상이 통찰은 잊혀졌다.

그래서 지멘스, 클리퍼 워드파워, BP 같은 이른바 ‘녹색 기업’들도 대안 에너지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경쟁자를 누르기 위해 얼마나 맹목적으로 경쟁하는지 묘사했다. “주식 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젠가 그 투기가 거액의 돈을 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타격을 입길 바란다. ‘Après moi le déluge!’ [내가 빠져 나간 다음 홍수에 와라!]는 모든 자본가와 자본 증식 과정의 좌우명이다.”

이런 경제 법칙은 환경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개별 자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할 결과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쟁력을 희생하면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방글라데시, 나일강 유역, 그리고 나중에는 런던에서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말이다.

불황기에 녹색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연료비가 치솟는 시기에 대규모 단일 프로그램의 도입이 당장이라도 생각할 것이다. 또, 건설 노동자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단일 공사와 대안 에너지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할 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런 대안들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석유와 다젤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바이

오연료조차 기후에는 똑같이 해롭기 때문이다.

기존 생산·소비 형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는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이윤 경쟁이 환경 재앙을 낳아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산업을 되살리자면, 이 산업들의 기술들을 이용해 출퇴근이나 여행을 할 때 최소한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비슷한 사례로, 모든 건물들에 무료로 단열 공사를 해 주는 긴급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택·사무실·공장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실질한 건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추가로 수십만 명에게 직접 훈련을 제공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

그러나 많은 환경 운동 활동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를 위해 보통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낮출 필요는 없다.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주요 부문들은 그런 투자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세계시장의 경쟁을 의식해 낡은 공장과 기술에서 이유를 최대한 뽑아내려 할 것이다.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알 바 없다. 심지어 신노동당의 기후변화 자금을 맡고 있는 스티븐 겐조자 불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용 상승에 매우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지멘스, 클리퍼 워드파워, BP 같은 이른바 ‘녹색 기업’들도 대안 에너지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경쟁자를 누르기 위해 얼마나 맹목적으로 경쟁하는지 묘사했다. “주식 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젠가 그 투기가 거액의 돈을 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타격을 입길 바란다. ‘Après moi le déluge!’ [내가 빠져 나간 다음 홍수에 와라!]는 모든 자본가와 자본 증식 과정의 좌우명이다.”

이런 경제 법칙은 환경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개별 자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할 결과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쟁력을 희생하면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방글라데시, 나일강 유역, 그리고 나중에는 런던에서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말이다.

불황기에 녹색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연료비가 치솟는 시기에 대규모 단일 프로그램의 도입이 당장이라도 생각할 것이다. 또, 건설 노동자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단일 공사와 대안 에너지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할 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런 대안들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석유와 다젤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바이

오연료조차 기후에는 똑같이 해롭기 때문이다.

번역 김용욱

중국 텐안먼 항쟁 20주년



탱크도 짓밟지 못한 용기와 투지 — 이것이 20년 전 중국 지배자들을 벌벌 떨게 했다.

1989년 텐안먼 민중 항쟁의 진정한 유산

천안문

20년 전, 중국의 독재 정권은 전국을 휩쓴 민주화 운동 앞에 거의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텐안먼 항쟁의 진정한 성격을 왜곡한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기자 매튜 쿡슨이 텐안먼 항쟁이 남긴 유산을 분석한다.

20년 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한 명의 시위 참가자가 탱크 부대의 진입을 막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했다. 중국군의 막강한 무력을 혈혈단신으로 막는 이 장면은 1989년 6월 텐안먼 광장 항쟁을 대표하는 장면이 됐다. 텐안먼 항쟁은 중국 지배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중국 통치자들은 무지막지한 폭력을 사용하여 가까스로 항쟁을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텐안먼 항쟁이 준 영감을 지울 수 없었고, 텐안먼 항쟁을 발생시킨 원인들 — 동일한 원인들이 오늘날 저항을 촉발하고 있다 — 을 해결할 수도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텐안먼 항쟁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자유시장 개혁을 지지하는 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정부 관료들의 부패와 세계시장 진출 시도가 낳은 모순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권력을 잡았다.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독립적 국민경제를 건설하고 싶어 했다.

비록 공산당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막상 그들의 정책은 수억 명의 중국 농민과 노동자 들의 필요를 부차적으로 취급했다.

국가자본주의

〈소셜리스트 워커〉는 이런 국가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국가자본주의 경제는 계급 분열과 착취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경쟁하는 민간 기업들이 아니라 국가가 생산을 통제한다.

마오쩌둥 정부는 당시 소련 — 스탈린 통치 아래 국가자본주의가 됐다 — 을 본따 사회를 조직하려 했다.

1976년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권좌에 올랐다. 그는 중국의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문호를 개방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 즉, 학생 · 노동자 ·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저항들이 벌어졌지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 상황은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의 죽음에 촉발한 민주화 시위로 바뀌기 시작했다.

후야오방은 1980년대 공산당 총서기로, 중국과 티베트에서 정치 개혁을 추진했다. 국가 관료들은 1987년 그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관료들은 후야오방이 학생 시위에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후야오방이 죽은 다음 날, 학생들은 그를 추모하려고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텐안먼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추모자의 숫자는 며칠 만에 수만 명으로 늘었고, 노동자들도 많았다.

광장에서 발언한 사람들은 민주적 선거, 언론 · 집회의 자유, 관료들의 부패 척결 등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위와 파업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익들은 보통 텐안먼 광장에서 있는 개인들의 용맹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당시 중국 지배자들이 왜 그렇게 겁에 질렸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중국 전역을 휩쓴 대규모 시위에 주목해야 한다.

겁에 질린 지배자들은 4월 22일 후야오방 장례식 날에 모든 시위를 금지했다. 경찰과 군인들이 텐안먼 광장을 봉쇄했다.

그러나 밤새 학생 대열이 밀려들면서 결국 경찰 저지선을 뚫었다. 다음 날 15만 명이 텐안먼 광장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연설을 듣고, 붉은 깃발을 흔들고, 사회주의자의 노래이자 텐안먼 항쟁의 노래가 된 인터내셔널가를 불렀다.

정부는 학생들을 진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 지배자는 군대가 시위대 진압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군이 계속 정부를 지지할지 알 수 없었다.

후야오방 장례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민주주의 만세, 독재 타도”를 외치며 텐안먼 광장에서 행진해 나왔다.

4월 27일 15만 명이 베이징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가 지나가는 공장과 작업장들은 휴업을 했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대에 지지를 보였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군인들이 시위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친 후, 5월 13일부터

1989년 텐안먼 항쟁은

중국 노동자·농민·학생들이

중국 지배자들에 도전하고 심지어

그들을 몰아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소수의 학생 지도자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이것을 계기로 텐안먼 시위는 새로운 절정을 향해 갔다.

계엄령과 저항

처음에 2백 명이 단식에 참가했지만 곧 1천 명을 넘어섰다. 시위대 수만 명이 텐안먼 광장을 점거했다. 단식 참가자들은 덩샤오핑 사퇴와 총리 리펑의 해임을 요구했다.

다음 날 시위대가 1백만 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 날에는 무려 2백만 명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단식을 중단시키려 애썼다. 리펑과 학생들의 개혁 요구에 동정적이었던 공산당 총서기 자오쯔양이 시위대와 면담했다.

이 회담이 실패하자, 정부는 5월 19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인 30만 명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학생과 노동자 들은 군대의 진입을 막으려고 베이징 외곽에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지하철을 군인 수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끊었다. 베이징 수도철강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박차고 나왔고, 다른 많은 노동자들도 출근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버스, 트럭, 건설 차량들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수백만 명이 군대를 저지하려고 거리에 나섰다.

대중의 힘 앞에 정부는 한발 물러섰고, 지배계급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 줬다.

당시 베이징에 있던 두 목격자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민중이 48시간째 베이징을 통제하고 있다. 분위기는 긴장돼 있지만, 술에 취한 사람도, 약탈도, 폭력도 없다.

“1킬로미터에 걸쳐, 1백여 대 이상의 버스를 뺨뺨이 겹치게 배치해 도로를 봉쇄했다. 이 바리케이드로는 탱크를 막을 수 없고, 원래 목적도 그것이 아니다. 군대의 이동을 방해하고 지연시켜 사람들이 병사들에게 돌아갈 것을 호소할 시간을 벌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실제로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해 왔다.

“노동자와 학생 들이 6평방마일 정도의 넓은 도시 중심부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노동

자와 학생 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사방에서 지나가고 있다. 트럭에는 붉은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꼈고, 트럭에 탄 사람들은 바리케이드 사이를 이동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 그들은 인터내셔널가를 계속 불렀다.”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1997년 중국으로 반환을 앞둔 홍콩에서도 1백만 명이 지지 시위를 벌였다.

베이징에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정권이 한숨 돌리며 다음번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다. 덩샤오핑과 여섯 명의 군지휘관들은 텐안먼 항쟁을 진압하기 위한 전담 부대를 꾸렸다.

6월 3일 부대들이 베이징으로 진입했다. 이른 아침, 장갑차와 탱크 들이 텐안먼 광장을 뚫고 들어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중국군의 공식 명칭은 ‘인민해방군’으로, 이때까지 사람들은 ‘인민해방군’이 정말로 발표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놀란 노동자들은 학생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고, 많은 노동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그들은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고 군인들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군인들은 다음 날 오후까지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야 저항을 진압할 수 있었다.

중국 적십자는 이때 2천6백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정부의 압력을 받고 철회했다. 수천 명이 부상했고, 병원들은 부상자들로 넘쳤다.

그러나 탄압은 계속됐다. 수만 명이 체포되고 상당수가 처형됐다. 6월 5일 탱크를 멈춘 익명의 시위 참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덩샤오핑과 중국의 지배자들은 자유시장 개혁을 지속했고, 중국 사회는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

지난 몇년 동안 노동자들이 억압적 경영자와 해고에 맞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고, 농민들이 부당한 세금 부과와 관료들의 부패에 맞서 싸우면서 투쟁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도 싸우고 있다.

20년 전 텐안먼 광장에서 볼 수 있었던 저항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 1989년 텐안먼 항쟁은 비록 학살로 막을 내렸지만, 중국 노동자 · 농민 · 학생 들이 중국 지배자들에 도전하고 심지어 그들을 몰아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래서 베이징의 도살자들은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

번역 김용욱 기자



탱크 위에 올라가 선동하는 텐안먼 항쟁 참가자들

텐안먼 항쟁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찰리 호어의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을 읽어 보시오.

작은 ‘마녀’가 드리는 글

저는 “전문시위꾼을 골라내겠다”며 무더기로 뿌린 소환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이 비열한 마녀사냥에 맞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두렵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수배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가 탄압이 저 개인에게 직접 향하는 것을 느꼈을 때의 괴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방문한 날 어머니의 혼들리는 눈과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니는 제가 집회에 나가는 것을 말리지는 않지만, 한층 더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가하면 한숨 쉬며 애 태우고 있을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종교가 없지만 그럴 때 마다 어느 신이라도 좋으니 절박하게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정부가 노리는 것일 테죠. 저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럼 저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도 던져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용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탄압의 칼날 앞에 물러서지 않고 “자유를 향해 고통치는” 제 심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용기에는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철거민 5명이 죽었을 때 광복한 탄압에도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 박종태 열사가 죽었을 때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2만 명은 경찰을 뚫고 살인기업 대한통운까지 행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날 죽음과 파괴로 점철된 이 정권에 분노한 사람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당장은 그 행동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도 직전의 기업이 어음을 막는 일과 비슷할 것입니다.

끓주린 늑대의 핏발 선 사냥이 겉으로 무서워 보여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용기를 내서 싸우면 우리는 언젠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 저를 지켜 주세요. 평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인 이 정부에 맞선 투쟁에 함께해 주세요.

승영

교정 당국의 어이없는 방송 시청 제한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해 지난 2월 구속돼, 현재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용생활 중에 겪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알리고 싶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각 거실에 비치된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특정 시각에 당일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저녁 8시 뉴스를, 주말에는 정오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과 24일에 교정당국은 ‘부득이한 사정’을 핑계로 예정된 정오뉴스 시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한동안 그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뒤늦게 23일 오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방영 예정 시각(주말 정오)에 주요 공중파 방송사들은 뉴스 특보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교정당국이 주말 내내 뉴스를 차단해 이 소식을 제때 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전직 대통령의 사망 소식으로 수용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면 이는 매우 지나친 기우일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망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갇힌 수용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소식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이 중대한 뉴스를 차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의 감옥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한 수용자가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 대통령 죽은 소식도 모르게 하고” 하며 푸념하는 것을 들으며,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시는 교정당국이 제멋대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25일
김영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다수 대자본가들이 개성공단을 “블루오션”이라 생각할까?

정병호 기자가 <레프트21> 6호에 쓴 개성공단 기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기사의 일부 서술에 의문이 있다. 다만, 내가 감옥에 갇힌 몸이라,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해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병호 기자는 “남한 정부와 기업들은 ... 남북경협 성과로 ...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한 정부와 기업들(즉, 남한 지배계급)에게 개성공단은 “블루오션”이라고 했다.

남한 지배자들이 대륙으로 가는 길목으로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이점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이 진술은 일반적으로는 옳을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에 러시아와 북한, 남한을 잇는 가스전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첩경으로 이해하고 이를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한 세력은 남한 지배

계급 내에서 여전히 상대적 소수다. 반면 지배계급 내 우익들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대북 퍼주기라 규정하고 비난해 왔다.

우익들은 6.15와 10.4 공동선언을 탐탁치 않아 했고, 처음부터 개성공단 건설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명박 집권 초에 김하중 당시 통일부장관의 “비핵화 이전까지 2단계 불가”가 개성공단 관련 첫 발언인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은 북한이 우선 (친시장적이고 친자유민주주의적으로) 변해야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가능하다는 대북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다수의 대자본가들도 남북경협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남한의 대자본가들에게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지리적 이점, 낮은 임금의 노동시장 등은 매력적인 요소다. 그래서 김대중 집권 후에 현대 등 일부 대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선점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따라 현대 그룹이 겪은 흥망성쇠를 보며 동료 대자본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주로 저임금에 관심이 큰 남한 중소기업들만 개성공단에 진출한 것 아닐까?

따라서 우파 정치인들의 개성공단 폐쇄 주장은 “본심이 아니라 데마고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간단하게 일축하는 정병호 기자의 주장에 선험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나도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지금 당장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따라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게 그저 공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개성공단 유지 문제는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추가적 제재 조치와 군사적 압박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우익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조선

<레프트21>을 후원합니다

희망을 안겨 주는 진보언론으로 발전하길

<레프트21>을 알기 전 같은 작업장 내에서 그 누구보다 더 희생하며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동지를 통해 ‘다함께’라는 단체를 간접적으로나마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나의 활동범위와 생각은 현장 활동에만 머물러 있었다. 즉 외부단체에 신뢰가 없었던 것이다.

기아차 작업장 내에는 여러 단체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 동지들과 대화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느낀 부분은 모든 부분을 원칙대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에서 벗어난 자본과의 타협은 안 되지만 조합원과 타협할 수는 있다고 본다. 조합원이 외면하는 활동가나 노동조합은 있으

나마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과 선입견에 머물러 있던 나 자신을 바꾸게 해 준 계기가 있었다. 작업장 내에서 같이 부서지 활동을 하는 동지가 회사 측에 의해 집중적인 탄압으로 구속되고 해고에 이르게 됐다. 그 당시 우리는 ‘구속동지 석방투쟁’을 전개했고, 구속된 동지의 공판이 있을 때면 법원 앞에서 계속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작업장 내에서 많은 동지들이 함께했지만 ‘다함께’ 학생·노동자 동지들이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함께한 것이 내 선입견을 떨쳐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이후 인터넷 또는 외부집회를

통해 다함께 회원 동지들의 활동을 접하면서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다함께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다함께 회원들이 지지하는 <레프트21>을 처음 받았을 때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동지들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행복했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진보언론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비록 지금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이 진보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머물러 있더라도 이후 사회적으로 약자 처지에 있는 민중 또는 노동자 전체가 구독할 수 있는 진보언론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승언 기아차 노동조합 조합원

<레프트21> 지역 촛불모임 판매 경험

나는 <레프트21> 창간호가 나오자마자 내가 속한 지역 촛불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좌파 신문 창간을 알리며 홍보를 시작했다. 무려 20여 명의 촛불회원들이 연락처를 정성껏 적어주며 신문에 큰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문까지 내다니 참 대단하다” “신문 제호가 선명해서 마음에 든다” “조금 더 보완하면 대안신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신문을 이명박이 가만히 놔둘까요?” 등 격정적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고 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줬다.

창간호를 권한 20여 명 중 무려 여섯 명이 그 자리에 바로 정기구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나는 단 3일 만에 여섯 명의 정기구독자를 조직하고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금은 여섯 명의 정기구독자 외에도 정기적으로 나를 통해 신문이 사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된다.

‘내수 확대’ 주장을 오해해선 안 된다

정성휘 씨는 지난 6호의 반론 기고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에서 “복지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내수 확대’에 이견을 표했다.

하지만 강동훈 기자는 이렇게 썼다. “지금이라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는 세제 개혁과 복지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 기자는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투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성휘 씨의 혼란은 “내수로 전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장에 요약돼 있다.

이런 방식의 ‘내수 확대’는 분명히 우리가 쟁취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본주의 극복을 대체할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강동훈 기자 역시 이 요구를 “근본적 대안”으로 격상시킨 바가 없다. 카드를 섞어 버린 것은 정성휘 씨다.

“한국 경제를 내수 확대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배계급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과도하다.

어차피 한국 정도 규모의 국민 경제는 내수를 등한시한 수출 위주 경제정책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배계급 스스로 한편에서 수출 진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한미FTA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내수 확대를 모색해 오고 있다. 김대중이 저질러 놓은 ‘카드대란’ 파위의 신용 거품 확대,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같은 환경 파괴형 토목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그 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내수 확대의 방향은 “급격”할 수도 완만할 수도 있고, “지배계급의 반발”을 부르는 방식(복지 확대 등)일 수도, 환영을 받을 방식(대규모 건설사업 등)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지배계급의 반발을 불러올 방향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조형석

그들은 가판을 하는 날에는 가판대까지 찾아와 격려를 해 주고 돌아간다.

신문을 통해 운동의 방향과 전략과 전술에 대해 토론하며 생각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은 정말이지 큰 즐거움이다. 그간 가깝게 지낼 기회가 없었던 한 촛불회원은 신문 정기구독을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컨텐츠가 더 풍부해지는 것 같다”며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논쟁점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하기도 한다.

<레프트21>은 운동을 건설하는 신문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생산해내는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레프트21>이 급진화하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기꺼이 남한의 당당한 좌파 ‘신문팔이’ 소녀가 될 것이다.

육오영화

김규항의 《예수전》

예수 얘기를 통해 본 어느 좌파의 자화상

예수전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교인은 무슨 소리냐 싶은 물음이었겠다. ‘복음서’라고 부르는 신약성서의 맨 앞 네 권(마태오·마르코·루가·요한)이 각각 그 나름의 독특한 예수전이거나, 그 안의 정보들을 종합하면 그것도 예수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현대의 불신양자가 도대체 숫처녀가 임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물 위를 걷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 문서를 어떻게 믿느냐는 물음을 던지면 대뜸 그리스도교인은 크게 들로 나뉠 것이다. 복음서를 거의 다 믿을 수 있다고 보는 보수파와 초자연적 기적 얘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믿을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로 말이다.

물론 보수파도 예수의 처녀 탄생과 부활과 재림까지 사실로 믿는 근본주의자와 그 정도까지는 아닌 온건 보수주의자로 나뉜다.

한편, 매우 자유주의적인 그리스도교인은 예수가 윤리적 행동의 본보기였다는 점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요컨대 복음서의 역사적 신빙성을 얼마나 믿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거의 1백퍼센트 믿는 근본주의자부터 이들이 증오하는 유명한 미국 신약성서학 학술단체인 예수세미나처럼 예수가 한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언행 가운데 겨우 18~20퍼센트만을 믿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들까지 실로 그리스도교인의 분포는 다양하다.

사실, 죽은 사람의 부활까지 믿는다면 그밖에 못 믿을 게 없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기적 얘기는 별문제로 하고 나머지 얘기들만이라도 역사상의 사실인지를 토론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문제는 네 복음서의 이 부분조차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신심과 영성을 고무하는 경건 문학으로서는 어쩔지 몰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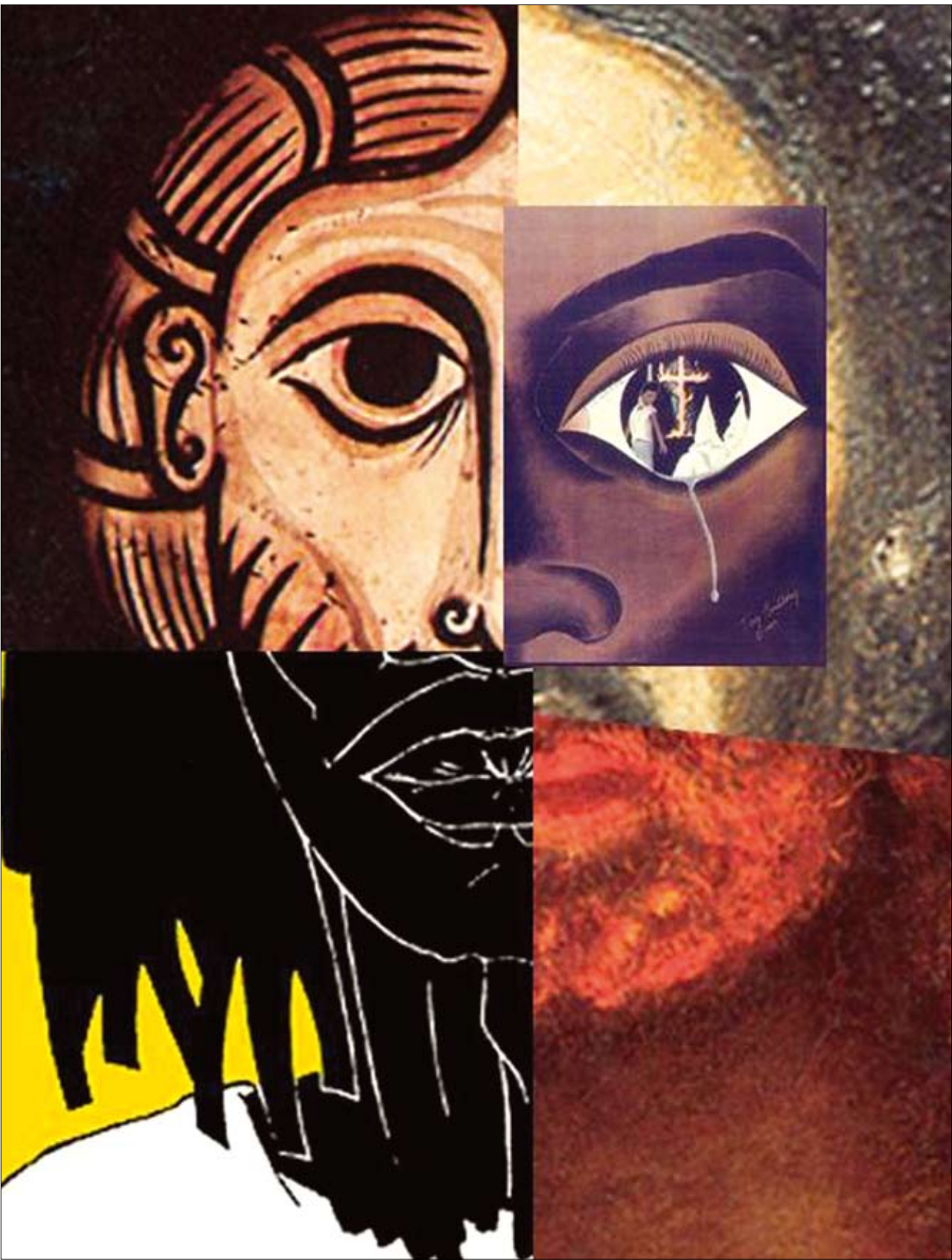
무엇보다 복음서의 진술이 모순투성이라는 점이다. 가령 마태오의 얘기(2,14~23)로는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간 데 반해, 루가의 얘기(2,22,39)로는 이집트로 가지 않았다. 마르코의 얘기(1,12~13)로는 청년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요

한 1의 얘기(2,1~2)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 예수의 사형이 유대교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요한 19,7) 그런 근거가 없다고도 한다(요한 18,31).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래아로 가야 한다고도 하고(마태 28,10),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도 한다(루가 24,49).

예수는 비폭력 무저항을 가르치는가 하면(마태 5,39; 26,52), 폭력적 저항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심지어 실천하기도 한다(루가 22,36; 요한 2,15). 예수의 사명은 평화라고도 하고(루가 2,13~14),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도 한다(마태 10,34~35). 재산은 찬양받는가 하면(마르 10,29~30), 저주받기도 한다(마태 6,19~21;19,24; 루가 6,20~24;16,22).

선행을 드러내라고 예수가 가르치는가 하면(마태 5,16),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고도 가르친다(마태 6,1). 신에게 기도로 끈덕지게 간청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면(루가 18,5,7), 그러지 말라고도 한다(마태 6,7,8). 예수를 믿는 데에 별로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마태 11,28~30),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고도 한다(요한 16,33).

역사상 많은 이단 시비와 때로 학살마저 일으킨 삼위일체 논쟁과 관계 있는 것으로, 예수는 자신이 신과 같다고 하는가



예수의 초상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을 그림의 대상에 반영시킨다.

하면(요한 10,30) 신과 같지 않다고도 한다(요한 14,28; 마태 24,36). 또, 자신이 전능하다고 하는가 하면(마태 28,18; 요한 3,35), 그렇지 않다고도 한다(마르 6,5).

예수는 유대교 율법이 자신의 가르침으로 대체됐다고 하는가 하면(루가 16,16), 유대교 율법을 엄수해야 한다고도 한다(마태 5,17~19). 초자연적 기적이 신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라고 하는가 하면(마태 11,2~5; 요한 3,2), 그런 증거가 못 된다고도 한다(루가 11,19).

복음서(그리고 성서 자체)의 이런 불일치와 모순 때문에 앵겔스도 이렇게 지적했다. “이 학파(튀빙언 학파 — 인용자)

에 속한 학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기적 얘기가 비현실적 얘기는 모두 받아들이 수 없다 해서 무시해 버렸다. 하지만 그 밖의 것들 가운데 ‘건질 수 있는 것들은 건져 내려’ 애쓴다. 여기서 이 신학 학파의 한계가 드러난다.”(F. 앵겔스, “조기 그리스도교의 역사,” 1894~95.)

혁명 전야, 성서에 의심을 품다

근대에 들어와 복음서 기록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이 자라나, 실제의 예수(‘역사적 예수’)는 복음서에 묘사된 바대로의 예수, 신앙의 대상인 예수와 다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더했다. 그런 가설을 최초로 체계화한 인물은 18세기 말의 계몽철학자 라이마루스였다. 그는 예수가 로마제국의 압제에서 유대인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자처했지만 로마 당국에 처형당해 참담하게 실패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려 감추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게 그리스도교의 기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라이마루스가 이런 급진적인 가설을 세운 때는 프랑스 대혁명 전야이자 계몽주의의 절정기였다. 이후로도 혁명을 앞두고 ‘불온한’ 기운이 서구 사회 전반을 감돌 때마다 성서에 대한 의심이 퍼져갔다.

1848~49년 유럽 혁명 전야인 1840년

대 초에 당시 마르크스와 청년 헤겔파(‘헤겔 좌파’) 동료 사이인 브루노 바우어는 성서의 예수 얘기가 신화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당연시했던 듯하다. 앵겔스도 40년 뒤 브루노 바우어 사망 소식을 듣고 시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대한 바우어의 공헌을 높이 사는 논설을 독일어 사회주의 정기간행물 《사회민주주의자》(1882년 5월 4~11일차)에 기고했다.

복음서 등 신약성서 문헌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론은 20세기 초반에 또다시 정점에 도달했다. 이 시기는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 제1차세계대전,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1918~20년 중·서부 유럽 혁명, 1930년대 대불황과 스페인 혁명, 프랑스 공장 점거 운동 등의 격변으로 점철된 질풍노도의 시기다.

1906년,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든 《예수의 생애 연구사》에서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19세기의 수많은 예수전이 어째서 실패작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낱낱이 들춰내면서, 복음서가 전거나 전기적 자료가 될 수 없음을 입증했다. 그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의술 활동을 한 공로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밀림의 성자’로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라이마루스와 브루노 바우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위대한 신약성서 학자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가톨릭 사제



김규항, 《예수전》
тол베개, 2009년, 266쪽,
13,000원
김규항 웹사이트
http://gyuhang.net/

이자 탁월한 신학자인 알프레드 루아지는 역사의 예수가 신앙의 대상 예수와 어렵פות하게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복음서의 희뿌연 연기를 뚫고 실제 예수의 광휘를 분명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해 1908년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당했다.

독일 혁명의 여파 속에서 출판된 《예수》(1926)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약성서 학자 루돌프 볼트만은 이렇게 썼다. “예수의 삶과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자료들이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데다 단편적이고, 흔히 전설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다른 [역사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보수주의자들이 예수에 대한 “독자적 확증”이라며 제시하는 로마 측 자료는 모두 중세의 필사본일 뿐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덧붙여진 게 뭘지 알 수 없다. 가령 타키투스 《연대기》의 가장 오랜 필사본은 11세기 것이다.

슈바이처와 볼트만보다 더 나아간 철저한 회의론자들도 있었다. 역사적 예수 탐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슈바이처는 예수가 유대교 묵시록의 전통에 따라 세 말을 예언했다고 상술했고, 볼트만도 예수에 대한 책을 썼던 것이다. 철저 회의론자들인 독일의 알베르트 칼토프와 아르투어 드레프스(Arthur Drews), 영국의 존 M. 로버트슨과 가톨릭 사제 출신자 조셉 맥케이브, 미국의 존 램스버그 등은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상의 인물일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런 주장에 동의했다. 칼 카우츠키는 《그리스도교의 기원》(1908)에서 예수 신화론을 개진했고, 레닌도 1922년에 쓴 한 논설(“투쟁적 유물론의 중요성에 대해”)에서 드레프스의 저작 《그리스도 신화》가 러시아어로 번역되는 것을 지지했다.

반자본주의 정서와 예수 상(像)

볼트만 이후 1990년대까지 그보다 더 회의적인 신약성서 문헌 분석가는 주류 신약성서 학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1968년 운동의 시대에 등장한 각종 해방 신학(라틴아메리카 민중 해방, 여성 해방, 흑인 해방, 성소수자 해방 등)은 정치적으로는 볼트만보다 진보적이었지만, 복음서 등 신약성서 문헌에 대한 역사학적 분석 면에서는 전혀 볼트만보다 진보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과 급진적 비판이 확산되면서 복음서와 나머지 신약성서 문서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고개를 들어, 역사적 예수 탐구와 예수전 집필 시도는 다시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가장 자유주의적인 경향의 역사적 예수 탐구자들은 예수세미나 회원들이다.(한국에도 알려진 대표 인물로 마커스 보그, 존 도미니크 크로산, 존 웰비 스펜, 월터 윙크 등이 있다.) 이들의 관점은 (1) 사회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2) 예수를 유대교 안에 자리 매김하고, (3) 예수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식 경전(‘경정’이라고 함)에 포함되지 못한 고대 그리스도교 문서들인 이른바 외경을 사용한다

민주노동당

“자주적 민주주의”는 계급 협력주의로 향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는 세 가지 점에서 이전의 역사적 예수 탐구와 구별된다.

그러나 급진적인 철저 회의론자들(가령 예수 신화론자들인 로버트 M 프라이스, 조지 알버트 웰스, 얼 도허티 등)은 예수세미나 회원들도 지난 2백여 년 동안의 예수전 집필자들이나 역사적 예수 탐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나 시초 교회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미리 결정하고는, 그 다음에, 예수의 생각이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는 구절들을 골랐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예수 당시로부터 유래하는 예수 얘기나 목격자 증언이 하나도 없는 한은 예수상(像)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결국 오늘날에도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해 예수전을 써 보려는 사람들은 슈바이처가 예리하게 지적한 문제점에 직면하고야 만다. 즉, 예수전을 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예수에게 투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초상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그림의 대상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낭만주의자는 예수를 낭만가로, 비폭력 평화주의자는 예수를 비폭력 평화주의자로, 사회 개혁주의자는 예수를 사회 개혁가로, 사회주의자나 혁명가는 예수를 사회주의자나 혁명가로 채색했다. 이렇게 말한 슈바이처 자신은 예수를 묵시록적 유대교 전통에 따라 세말을 경고한 예언자로 보고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러 떠났다. 최근 인기를 끄는 일부 ‘예수세미나’ 회원들은 예수를 동시대 권유철학파의 현인으로 본다.

권유철학파는 재산·권력·명예·건강에 대한 욕망을 거부하고 자연과 부합하는 반(反)인습적 삶을 살았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의 권유철학자 시노페 태생 디오게네스는 아테네 거리의 노숙자로 뽀 모양의 용기 속에서 살아 그 학파의 전형을 보여 줬다. 크로산과 버튼 맥 등의 주장은 예수가 이와 비슷한 일종의 대항문화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 사제 출신인 크로산은 예수가 국가 권력에는 도전하지 않은 채 사회의 근본적 변혁에 헌신했다는 주장을 해, 2000년대 반자본주의 운동 내 자율주의적 크리스천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결론을 맺자면, 김규향의 예수전은 예수라는 거울에 반사된 좌파 칼럼니스트 김규향의 상(像)이다. 현대판은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의 글은 무조건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나 자신은 예수가 십중팔구 역사상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의 하나 그가 정말 실존 인물이었다면 김규향이 묘사한 것과 흡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일봉

추천 도서

- ▶ 비트 어만, 《성경 왜곡의 역사》, 청림, 2006년. 교회가 예수를 그릇 인용했다는 주장.
- ▶ 존 엘비스, 《만들어진 예수 참 사람 예수》,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년. 역사적 예수의 관점. 진보적인 입장.
- ▶ 얼 도허티, 《예수 퍼즐》, 씽크뱅크, 2007년. 신화적 예수의 관점.



5월 30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5월 30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당 지도부는 대의원대회(6월 20~21일)에 제출할 당의 이념을 “자주적 민주주의”(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강령(“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의 최대 다수파인 자주파는 일찍부터 사회주의 강령을 반대해 왔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정당으로 비취질 경우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선거주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차베스가 사회주의라는 최대 강령을 갖고 시작했다면 선거를 통해 집권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민주노동당 2009 제2차 중앙위원회 자료집 98쪽)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자주파가 추구하는 전략과 관계 있다. 스탈린주의의 단계혁명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변혁은 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 “전반적인 사회적 소유는 현실의 한계로 인해 당면한 구현하기에는 과도한 목표”이기 때문이다(98쪽).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족 자주’를 수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는”(22쪽) “자주적 민주주의”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

애초 단계론은 후진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미약해 전자본주의적 잔재가 많고(중앙위원회에서 최규업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장은 한국 사회가 “반(半)봉건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로 말미암아 노동계급의 규모도 아주 작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건너뛸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변혁 전략은 비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매우 크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관계의 지배라는 한계 내에 머무르는 것”이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발전 수준이나 사회 구조나 전통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즉 모든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지가 지배하고 있다.”(트로츠키)

더구나 한국 자본주의는 후진국이나 제3세계가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미국 자

본주의의 하위 동맹자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이 미국 제국주의에 “종속”돼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한 예로,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됐으며,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최대 투자국도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다.

또, 한국 국가는 이미 10여 개 이상의 나라에 한국군을 파병해 놓고 있다. 이것은 단지 미국 제국주의의 압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한 한국 국가의 능동적 전략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 자본주의는 1960년대 후반 이래 변화하기 시작한 세계 자본주의의 패턴, 즉 경제의 상호침투 과정(자본의 국제화)에 적극 뛰어들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고(오늘날 한국 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12위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형성됐다. 계급 분단이 근본적인 사회적 분할선이 된 것이다.

계급 협력주의

그러나 자주파는 한국 자본주의의 “예속성”과 “천민성”을 강조하며 “민족 자주”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자주파에게 “민족 자주”는 곧 민족통일을 뜻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전략적 과제”(107쪽)가 된다.

이를 위해 범계급적 단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집권 주제”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고 소생산자, 양심적인 민주 세력, 청년학생”과 함께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연세상공인뿐 아니라 미일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까지 포함한다.(107쪽)

이런 국민전선(민중전선) 전략에 따르면 “민족화합적” 자본가들과 냉전적 자본가들이 구별된다. 2001년에 정주영이 죽었을 때 범청학련이 조문을 한 것도 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월 15일 중앙위원회의 결정, 즉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 행위를 스스로 봉쇄하는 그릇된 결정”(177쪽)이라며 평가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계급 연합 전략을 되살리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 전략적 과제”라면 민족통일이 계급투쟁에 선행해야 한다. 물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는 민족자결권을 옹호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적 민족통일을 지지한다. 더구나 한반도는 민족구성원 대다수의 의사를 거슬러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이 이뤄졌다.

그러나 통일은 노동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다. 계급투쟁보다 부차적이다. 분단 60년 동안 남과 북 모두에서 자본 축적의 중심이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계급 분단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는 남북화해나 통일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반면, “통일이 전략적 과제”라고 여기는 자주파는 노동자들이 계급 이해 관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통일운동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의 교훈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돼야 사회주의 변혁이 현실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자주파에게 사회주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상과 사회상”이다.(98쪽) 그러나 그들의 구상에서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서 노동계급의 결정적 구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고 본다.

요즘 상당수 자주파는 차베스의 불리바르식 혁명이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사회주의로 이행 모델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우고 차베스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의 상징처럼 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위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개혁도 제공했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진보적인 정부의 모습과 한계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차베스 정부가 우파의 반동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니라 그 사회(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좌경화 물결 덕분이다. 이 좌경화 물결에는 두 가지 상이한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 차베스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국내외 지배계급은 혼란, 분열, 충격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의 경제 지배력에 도전하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결과에 반대하는 노동자, 도시 빈민, 농민, 원주민의 대중 반란이다. 다른 하나의 중심에는 국민 자본주의 또는 국가 자본주의 개발이라는 포퓰리스트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지식인과 (일부 장교들을 포함한) 중간계급이 있다. 물론, 후자도 미국 제국주의 이해 관계에 도전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중 운동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것쯤으로 여긴다.

두 구성 요소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중간계급 정치인이나 장교들의 반제국주의 도전은 대중으로부터 열렬하게 지지받는다. 이것이 대중 저항을 고무한다. 차베스 정부 전복 시도에 맞서 차베스 방어에 나선 대중적 동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부 중간계급 활동가들과 장교들은 대중 운동에 열광하고 그 요구들 중 일부(가령, 국유화)를 채택한다.

그럼에도 사태전개의 논리는 두 구성요소를 상이한 방향으로 이끈다. 국민경제 발전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토착 부르주아지가 제국주의와 단절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잉여 축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들에게 대중의 경제적 요구는 제국주의 압력만큼이나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집권한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의 요구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경제 발전을 우선할 것인가?

게다가 차베스가 수장으로 있는 국가 기구는 자본주의의 이해 관계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국가 기구는 잘해야 건설적으로 개혁을 수행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개혁을 사보타주한다.

자주적 민주정부가 등장할지라도 국내외 지배계급으로부터 개혁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반동에 맞서 후퇴 없이 반독점 민주개혁을 지키려면 노동계급의 힘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힘을 진정으로 발휘하려면 자기해방 투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자주적 민주정부의 계급 협력주의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국내외 지배계급은 분명한 위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혼란, 분열, 충격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의 경제 지배력에 도전하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주적 민주주의에 담겨 있는 계급 협력주의는 이런 과제 수행을 방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내놓으려는 자주적 민주주의 이념은 전략적 오류를 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김인식 | kis@left21.com

리뷰

우원석 영화칼럼

〈마더〉 — 인간에 대한 예의



〈E.T〉(1982)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모든 작품들은 영화 연출의 교과서다. 알팍한 주제의식 때문에 비평적인 점수가 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면 연출의 솜씨를 놓고 보면 그와 견줄 만한 동시대 감독은 없다.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감, 장면의 시점, 연기 연출, 컷(Cut)의 경제성과 리듬감 등 연출의 모든 면에서 그는 탁월한 장인이다. 그런데 최근 개봉한 영화들 중 스필버그의 작품처럼 연출 교과서의 반열에 오를 만한 영화가 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마더〉다.

〈마더〉는 정신지체인 아들이 살인누명을 쓰자 엄마가 필사적인 구명 노력을 한다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엄마는 법과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무법천지의 황야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서부극의 카우보이처럼, 엄마는 스스로 탐정이 되고 취조관이 돼 사건을 파헤친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엄마의 육체적, 물리적 고난은 도덕적, 정신적 고난으로 변해간다.

〈마더〉의 내러티브는 빈틈이 없고, 모성애를 다른 주제의식은 독창적이지는 않으나 — 영화의 유일한 흠이다 — 나름으로 의미가 있다. 수천 컷에 달하는 장면들 하나하나의 밀도는 압도적으로 높다. 돈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가 아니다. 연출의 세밀함이 스필버그처럼 탁월하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캐릭터의 조형술이 탁월하다. 극중 인물들이 원래부터 실재한 존재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다. 동시대 사람들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풍부한 입체감과 질감으로 묘사했다. 이런 성취는 인간에 대한 성실한 통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마더〉는 인간에 대한 예의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사회 현실

물론 인간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이런 영화적 세공술이 봉준호 감독만의 것은 아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 베트남전 반대 운동 등 사회적 격변을 겪던 1960년 대말 미국에서 출현한 아메리칸 뉴웨이브 영화들이 그런 기법의 대표 주자다.

아서 펜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1967), 데니스 호퍼의 〈이지 라이더〉(1969) 등으로 시작된 뉴웨이브 영화들은 기성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적 전통과 결별하고 동시대 인간과 현실의 회로애락을 주의 깊게, 그리고 입체감 있게 스크린에 담았다. 이런 흐름은 피터 보그다노비치의 〈마지막 상영관〉(1971),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도청〉(1974) 등과 같이 진중한 드라마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포영화라 불리는 윌리엄 프리드킨의 〈엑소시스트〉(1973)를 봐도 그렇다. 두 시간이 넘는 상영시간 동안 귀신이 나오는 분량은 십여 분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등장인물들과 현실의 질감을 높이는 데 할애된다.

〈마더〉는 여러모로 아메리칸 뉴웨이브 영화를 닮았다. 잘 생긴 원빈을 보고 싶은 관객이든, 모성에 답론이 굶급한 관객이든, 2009년 한국 사회 현실이 굶급한 관객이든, 그 누구든 간에 이 영화와 함께하는 두 시간은 분명 만족스러울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영화란 모름지기 스타일에서든 내용에서든 극단적이어야 제 맛이라고 생각하는 하드코어 취향 관객들이 되겠다. 그런 이들에게 이 영화의 조심스런 균형감이 못마땅할 것이다. 이 경우 〈12인의 성난 사람들〉(1957), 〈허공에의 질주〉(1988) 등으로 유명한 거장 시드니 루멧의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를 권한다. 어느 미국 중산층 가정의 처참한 자멸을 그린 이 영화는 85세 노장 감독이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차 없이 날카롭다.

여담으로, 엽기적인 예로틱 드라마 〈피아니스트〉(2002)로 우리를 경악시켰던 미카엘 하네케의 신작 〈하얀 리본〉과 덴마크의 악동 감독 라스 폰 트리에의 〈안티 크라이스트〉가 곧 수입될 것 같다. 둘 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 상을 탄 덕분이다. 그런데 〈하얀 리본〉은 영화제 관객 일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만큼 불쾌하다고 하고, 악마적 공포영화라 불리는 〈안티 크라이스트〉는 기자들이 감독에게 왜 이따위 영화를 만들었느냐며 울분에 찬 항의를 했을 정도로 잔혹하다고 한다. 하드코어 관객이라면 두 영화 모두 많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우원석 영화감독

김광일,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책갈피)

촛불항쟁의 산 증인이 쓴 촛불 평가와 전망



2008년 촛불시위의 한 장면

사진 이윤선

우리는 아직 그를 기억한다. 지난해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방송차 위에서 특유의 선동적 목소리로 구호를 선창하고 투쟁을 호소하며 자신의 열정을 불사르던 그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이명박 정부의 광기 어린 공안 탄압 칼바람이 몰아치는 지금 그가 더욱 그리운 것은 그래서다. 그가 자신을 쫓는 경찰의 눈을 피해 1년 가까이 힘든 수배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쓴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그의 또 다른 투쟁 방식이고 저항의 수단이다. 그는 김광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행진팀장이다.

이 책은 그동안 나온 촛불항쟁 관련 책들과 여러모로 다르다.

지은이는 지난해 촛불항쟁 당시 정치적 지도부 구실을 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아 불철주야 현장의 한복판을 누비던, 운동의 산 증인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는 평생에 한 번 해 보기 힘든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자의 정치적 관점과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하겠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촛불항쟁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의 일당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스탈린주의와 완전히 다르다.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 대한 변증법적·유물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운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전략·전술을 제시할 수 있

게 해 준다. 지은이는 바로 이 관점에서 촛불항쟁을 분석하고 그 강점과 약점을 지적하면서 미래의 저항을 위한 교훈을 도출한다. 특히,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혁명의 경험에 비춰 촛불항쟁을 살펴보는 것은 이 책만의 장점이다. 촛불항쟁이 혁명도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혁명과 비교하는 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해부가 원숭이 해부의 열쇠라고 했던 마르크스의 말처럼〈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중원문화, 227쪽) 사물의 가장 고차원적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보다 미발견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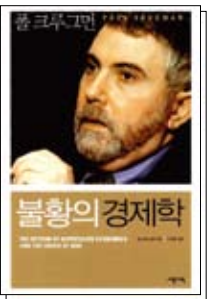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책은 지은이를 포함한 촛불 수배자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팎의 주요 지도자들과 활동가들, 촛불항쟁을 다룬 이런저런 책의 저자들을 실험으로 거론하면서 그들의 활동과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지은이는 그동안 한국의 다양한 공동전선에서 활동하면서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동지적 비판을 제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운동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지 않고서 2008년 한국의 촛불항쟁을 이야기한다는 것, 특히 진보나 좌파의 관점과 시각에서 촛불항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터이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이론적·실천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논쟁이 뜨거워지기를 바란다.

이수현

폴 크루그먼, 《불황의 경제학》(세종서적)

주류경제학 비판자가 말하는 ‘불황을 체제 내에서 다루는 법’



1994년 1월 대통령 김영삼은 신년연설에서 유난히 세계화라는 말을 여러번 언급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시아 여러 나라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한국도 초겨울 어느날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가혹한 냉기 속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 이번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급속한 경기하락과 금융 위기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있다.

이 와중에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책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유는 그가 세계화의 화려한 듯 보였던 꽃과 지금의 악취에 대해서 그 해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불황의 경제학》(이하 《불황》)은 10년 전에 출판된 바 있다. 이번 출판은 크루그먼이 지난 10년간의 새로운 데이터와 경험을 새롭게 추가하고 대체한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데이터와 경험은 전혀 새롭게롭지 않다. 단지 크루그먼이 얘기하고 싶은 것에 대한 최근 예일 뿐이다.

그가 말하고자 한 내용은 이미 10년 전에 출판됐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를 떠나 크루그먼의 관찰력과 혜안은 무척이나 놀랍다.

크루그먼은 《불황》에서 공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시장에서 소화될 것이라 얘기하며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세력들을 일찌감치 규제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화근이라고 말한다. 금융세계화 덕분에 자기자본의 1백 곱절이나 되는 차입

자금을 이용해 공격적 투기를 일삼아 온 세력들이 건전한 시장을 뒤흔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환투기 세력만을 탓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주요 측면의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물경기 위기를 앞당기거나 의심으로 인한 파산을 유발시켜 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켰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가 헤지펀드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은행 구실을 해 왔던 헤지펀드들을 이제 규제의 틀 속으로 끌어와야 하고 금융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완전한 국유화에 가까운 상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는 안전해진 이후에는 금융을 다시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정부의 입김이 더 강해져야 하고 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 위기를 대충 지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금융 개혁이 없다면 일본처럼 높은 실업률 속에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신자유주의가 저지른 폐해

그는 신자유주의가 저질러 온 폐해 때문에 생긴 대중의 상처를 잘 보듬어 준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도 든다.

과거 부의 과도한 편중을 막고 미국 중산층을 확산시켰던 강한 노동 계급 활동이 그것을 넘어 항구적인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한때는 케인스식 처방이 유효했다면 왜 다시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조합해 놓은 공급중심 경제학’(크루그먼이 한 말이다)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다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을까?

그리고 왜 다시 세계는 허겁지겁 케인스의 처방을 끌어내오는 걸까?

주류경제학은 근본적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하

지 않는다. 크루그먼 자신은 《불황》에서 주류경제학은 경기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공급 물량을 무리없이 계속해서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면 케인스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다시 울 자기 차레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크루그먼이 이미 10년 전에 아시아 위기를 보며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비판한 점과 그가 주장하는 평등의 정치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때 공급중심 경제학자들을 대거 등용했던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주요 측면을 중시하는 크루그먼도 약 2년간 그곳에서 일했다. 크루그먼이 말하는 위기 탈출도 자본주의를 구하자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도 등 제3세계의 경기 부흥은 자본가들의 선량함이나 인도주의와는 상관없음을 그는 분명히 말한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세계를 구하고자 한다. 그는 국가가 규제를 통해 탐욕을 잠재우는 구실을 하기 바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국가 기관은 누가 운영하며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평범한 유권자인가? 아니면 고액의 사교육을 받으며 자란 엘리트들인가?

크루그먼은 “금융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다소 ‘사회주의적’이라는 우려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말한다. 그가 옳다. 그러나 그는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 주지만, 불행히도 자본의 경제 지배력에 근본으로 도전하지는 못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크루그먼식의 개혁 조치를 지지함과 동시에 그 개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맞선 근본적 도전이 필요함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심호철

칼럼/논설

호썸 엘하말라위 칼럼

오바마가 이집트 민주화 운동의 친구일까?



호썸 엘하말라위 이집트 신문 <엘바달> 기자

바락 오바마가 6월 4일에 이집트를 방문한다. 카이로의 한 대학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외신 보도를 보면, 오바마는 단지 아랍 세계만이 아니라 무슬림 세계에 연설하기 위해 이집트를 선택했다고 한다. 일부 이집트 자유주의자들은 오바마의 방문에 대단한 기대를 보내며, 이집트 영자 신문에 오바마에게 아첨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오바마는 이집트 방문을 앞두고 BBC와 한 인터뷰에서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무바라크는 많은 점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대단히 힘든 일이지요.”

이에 BBC 기자가 무바라크는 “권위주의적”이지 않냐고 묻자 오바마는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답했다.

그럼, 오바마 씨, 당신의 ‘소중한 동맹’ 이 최근 한 일을 한번 보시죠.

무바라크의 경찰은 자기 친구이자 집권당인 민족민주당(NDP) 소속 관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무바라크의 법원은 이 두 명에게 고작 1년형을 선고했다.

무바라크의 보안 경찰은 이집트의

대표적 야당인 무슬림형제단 활동가 파레스 바락의 집을 불법적으로 수색했고, 바락이 항의하자 그를 4층 밑으로 던져 버렸다.

‘고문 희생자 치료를 위한 알나담 센터’는 그의 현 상태를 이렇게 전했다. “오른쪽 다리 · 엉덩이 · 어깨 · 코 · 등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심하게 손상됐다. 위 내부와 간 주변에 혈액이 고여 있고,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복부에 고여 있는 혈액 때문에 호흡에 불편을 겪고 있다.”

철권 통치

이집트의 고문 활동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 연관돼 있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이집트에게 일반적 형태의 아웃소싱 — 콜센터나 기술 지원 서비스 — 이 아니라 고문 활동을 ‘아웃소싱’ 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미국은 ‘테러 용의자’ 압도호 하빔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하기 전에 이집트의 고문 기술자에게 보냈다. 하빔은 이집트에서 “뱃줄에 묶여 공중에 매달린 채 반복적으로 전기고문을 당하고, 물고문으로 거의 익사할 뻔하고, 무지막지한 구타를 당했다.”

소중한 고객의 방문을 준비하려고 무바라크는 일찍부터 법석을 떨었

다. 오바마가 차를 타고 지나갈 다리를 새로 칠하고 가로등을 교체했다. 이번만이 아니다. 이집트 보안 경찰은 오바마 방문지 중 하나인 알아자르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백 명을 잡아다 조사했다. 주로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출신 학생들로 ‘미국의 잠재적 적성 국가’에서 왔다는 것이 그들의 죄였다. 보안 경찰은 그들에게서 어떠한 수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바마가 이집트를 중요한 방문지로 선택한 것 자체가 28년간 이집트를 철권 통치한 무바라크 독재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주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방문해 10억 달러의 군사지원이 지속될 거라 약속했다.

오바마가 카이로 대학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하든, 미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바마의 이집트 방문은 미국 정부가 제국의 이기적 정책 목표를 중동 민주화나 자결권으로 포장할 뿐이라는 무슬림 세계의 상투적인 말이 옳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집트 민주화 운동은 미국과 서방에 많은 지지자가 있다. 그러나 확실히 백악관에는 없다.

자이 자일스 웡파콘 칼럼

몰락하는 타이 왕당파



자이 자일스 웡파콘 타이 출라롱코른대학교 정치학 교수 / 타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2004년 10월 25일 타이 정부는 타이 남부 탁바이군(郡)의 비무장 시위대를 군병력을 동원해 체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밧줄로 묶인 채 육군 트럭에 짐짝처럼 예닐곱 겹으로 포개 실렸다.

햇볕이 뜨거운 날씨에 그들은 군 기지에 도달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트럭 안에 갇혀 있었다. 그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에 더해 78명이 그렇게 질식사해 죽었다. 모두 타이 국가의 의도적 살인 행위에 희생됐다. 당시 정부 · 육군 · 경찰이 모두 공모자였다. 그러나 타이 사법부는 정부 관료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타이에는 오랜 국가 범죄의 역사가 있다. 1973년 10월 14일, 1976년 10월 6일, 1991년 5월, 2004년 탁바이,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2009년 4월 방콕 거리에서의 학살 등등.

이 범죄들은 모두 타이 정부와 지배 엘리트가 결탁해 타이 보안군이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한 것이었다. 2004년 4월 크루에 사 사원에서는 청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정부 관료들 중 아무도 이 학살들에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또 다시 학살해도 좋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탁바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예상했던 바다. 타이 사법부는 정의롭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 타이에서 법치란 없고, 이중 잣대만 존재할 뿐이다. 왕당파인 ‘노란 셔츠’들은 폭력을 사용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붉은 셔츠’들은 처벌받았다.

타이에서 시민을 죽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통치 질서를 비판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타이 국가 관리들, 군과 사법부는 반민주적 법률 — 국왕 모독죄, 법정 모독죄, 국가안전법, 인터넷 검열법 등 — 로 보호받는다. 아피시트 타이 총리는 타이 국가가 법대로 통치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거짓말한다. 그는 모든 주류 미디어가 정부와 왕당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학살의 역사

‘붉은 셔츠’ 운동에게 탁바이, 크루에 사, “마약과의 전쟁”은 도전을 제기한다. ‘붉은 셔츠’ 운동은 탁신 정부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

는 안 된다. ‘붉은 셔츠’ 운동은 올바른 주장에 입각해 민주 타이를 건설해야 한다. 미래에 ‘붉은 셔츠’ 정부가 성립되면, 반드시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탁신 정부가 국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2006년 쿠데타, 법원의 편파적 판결, 민주당의 불법적 정권 찬탈, ‘노란 셔츠’의 폭력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군대, 왕당파 ‘노란 셔츠’ 모두 손에 피를 묻혔다.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들을 모두 끌어버려야 한다. 물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왕당파와 군대는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선거나 헌법을 조금 뜯어 고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붉은 셔츠’ 운동을 권위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강력한 기층 민중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구질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왕실과 군부 쿠데타를 열심히 지지한 대가로 그들은 모든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

심지어 일부 왕당파들은 러시아 짜르를 지지하고, ‘노란 셔츠’는 북한식 경제 모델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적으로 몰락하고 있다. 타이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논설

6월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슬프다’는 답이 91퍼센트였다. 노제 때는 무려 50만여 명이 모여서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통곡했다. 특히 이명박이 현화할 때는 서울 도심이 “이명박 물러가라”, “살인마 이명박”이라는 소리로 뒤덮일 정도였다.

이 거대한 추모 물결 속에는 명백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증오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유서 속에서 자신들의 고통에 찬 현실을 봤다. 비주류 출신 전직 대통령의 죽음 속에서 주류 기득권 세력만 득세하는 치 떨리는 현실을 봤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 · 개혁 · 평화 · 사회정의 등을 ‘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며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눈물 흘렸다.

이 분노와 통한의 눈물을 보며 한나라당 안상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봐 정말 걱정”했다. 그러나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동안의 역주행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 1년은 용산참사 희생자와 박종태 열사 등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간, 상위 20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인 8.68배로 벌어진 기간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고인의 뜻’이라며 ‘국민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역겹다. 살 곳을 달라는 철거민을 불태워 죽인 것은, 운송료 30원 인상을 거절해 노동자를 죽게 한 것은, 대량 해고에 몰린 쌍용차 노동자를 뇌출혈로 죽게 한 것은 ‘국민 살육’ 정책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에 저항하지 못하게 민주주의를 공격했다. 특히 이번엔 ‘눈물’까지 가로막고 뽀뽀한 차벽을 세우는 것에 우리는 숨이 막힐 듯했다. 아무도 ‘아늑’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커져가던 촛불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 불길이 돌파구만 찾으면 광야를 불사를 것이 분명하다. 경찰 폭력과 필사적인 집회 · 시위 봉쇄는 이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우파는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이 ‘국민장’에 쏠린 틈에 집회신고제 합헌 판결, 삼성 무죄 판결, 최저임금 삭감 요구, 공기업 신입 사원 임금 삭감과 연봉제 도입 등을 강행했다. 이명박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 잡고 일해야 한다”며 MB악법도 강행하려 한다.

전술적 제휴

물론 국민 다수의 증오를 받는 정부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할 때 터질 위기의 크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한 정치 위기와 내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재벌 · 부자에 기반을 두고 그들을 대변하는 정부에게 ‘재벌천국 서민지옥’ 추진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동아일보>는 MB악법을 “6월 국회에서 ... 처리하지 못하면 이 정권은 막장으로 밀려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정부는 위험천만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조차 우파 결집과 반정부 여론 악화에 이용하며 개악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커커이 쌓여 온 분노와 불만을 이명박 정부와 반서민 · 반민주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집중시켜 그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조직된 진보진영이 이런 폭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도 해야 한다. ‘추모 정국’ 속에 민주당이 반이명박 정서의 한 구심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어떠한 제휴도 거부하는 경직된 태도는 현명한 것이 아니다. 물론,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재벌 · 대기업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조직 노동자들이 지금의 대정부 정치 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의 힘을 키우고 노동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다. 이것은 경제 투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 5월 30일에 1만여 명의 공공부문 ·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 범국민대회에 오지 않고 여의도에서 분리된 집회를 한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은 대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며 경제적 투쟁에 스스로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정치(투쟁) 기피 태도(노동자주의)는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작용과 결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월 10일로 예정된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주최하는 범국민대회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적극 참가해야 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 수준을 넘어 전략적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된다. ‘추모’ 분위기에 녹아 노무현 정부 5년의 실패와 파산(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확대, 한미FTA 추진 등)을 잊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바로 몇 주 전에 ‘뉴민주당 플랜’을 운운하며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김효석)고 했던 장본인들이다.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은 반서민 · 반민주 정부에 맞서는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노동자 · 서민의 단결과 대중 투쟁에 있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주)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쌍용차 점거 파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사측의 온갖 이간질과 공격에도 1천 1백여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2주 넘게 점거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은 경제 위기 교통전기에 시달리는 노동자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각 지부의 순회 지지 방문이 시작됐고, 대학병원노조, 완성차를 운반하는 화물연대 활동가 등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다함께' 등도 공장에서 연대 집회를 열어 파업 노동자들을 고무했다.

파업 대열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점거 파업이 굳건히 유지되면서 새롭게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점거 파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강경 일변도이다. 강제 해고와 다름없는 '희망퇴직'이 네 차례나 반복되는 동안 해고 압박에 시달리던 조합원이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해고는 살인"인 것이다.

최근 사측은 직장폐쇄 조치와 함께 지도부를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을 압박하고 있다.

쌍용차 대량해고의 성공 여부가 '국정 최대 과제인 노동유연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측과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들은 쌍용차 파업이 '추모 정국' 이후 한층 확대된 반정부 정서와 투쟁에 결합될까 봐 더욱 탄압에 혈안이다.

그런데 쌍용차는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3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 파업이 이윤에 미치는 타격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현대·기아차나 화물연대처럼 자체 파업만으로도 전체 기업주들에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 5월 27일 해고 압박에 시달리던 조합원의 뇌출혈 사망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사진 임수현

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작업장에 비하면 대정부 압박을 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 3사 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또 쌍용차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적 공격에 대한 저항과 연결돼야 한다. 그 점에서 '추모 정국'이란 정부 시위로 분출할 잠재력을 보여 준 5월 29일과 30일 시청 앞 집회에 쌍용차노조 지도부가 조합원들을 동참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지난해 촛불항쟁 당시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화물연대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쌍용차 파업도 반정부 정서와 정치 투쟁에 가세하고 기여함으로써 강력해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고용 보장을 위해서라도 쌍용차 파업은 대정부 정치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파업의 강화와 연대 투쟁의 확산을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은 경찰력 침탈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공장 점거를 사수해야 한다. 1998년 현대차 점거 파업 때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대열을 보고 끝내 경찰력 투입을 포기해야 했다.

사실, 노동자 천여 명이 철통같이 바리케이드를 쌓고 항전한다면 강제 진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흔들림 없이 계속 되자 당황한 사측은 일정을 앞당겨 정리해고자 명단 우편발송을 시작했다.

이에 쌍용차노조는 옮겨도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고 통지서를 모아 소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경찰 침탈에 대비해 '공장을 요새화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쌍용차노조 지도부가 고용만 보장되면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등을 양보할 수 있다는 제안을 계속하는 것은 아쉽다.

임금을 양보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고 싶은 심정을 모르지는 않으나 정부는 그럴 뜻이 전혀 없다. 저들은 일자리 자체를 줄이고, 임금도 깎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파업 대열을 늘리고 단결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 점에서 파업 불참 조합원 2천여 명을 무더기 제명하기보다 그들을 설득하고 파업에 동참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확신이 부족해 동참하지 못했다가 파업의 힘을 보고 동참하는 조합원들이나, 해고 통보를 받고 격분해서 뒤늦게라도 싸우려는 조합원들에게는 함께 싸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이다. 파업 첫날인 5월 22일 전국에서 상경한 금속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쌍용차 파업 출정 집회에 참가한 것은 큰 힘이 됐다. 경찰력 투입 협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연대가 시급하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함께 만들어 6월 3일 출범한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시급히 연대 행동 건설에 나서야 한다.

평택공장 앞에서 전국 집중 노동자대회 등이 열려야 하며, 자동차 3사 노조 지도부가 약속한 연대 파업이 현실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를 두렵게 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

화물연대가 6월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강력한 물류 봉쇄 파업이 이뤄진다면, 이미 정치적 위기와 공지에 몰려 있는 이명박에게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한 달 전 박종태 열사가 대한통운의 해고와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자결하자, 분노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5월 16일 만장일치로 전면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통운 사측은 여전히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돌입시 면허를 취소하고 유류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

했다. 16일 대전 시위를 빌미로 조합원 20명을 구속했고, 지도부를 수배 조치했다. 화물연대 본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박종태 열사 살인 공범들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탐욕을 위협할 화물연대 파업 막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전직 대통령 추모도 경찰 군화발로 가로막는 정권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박종태 열사의 유서 중)들의 요구에는 오죽하겠는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파업은 안 된다'는 논리로 궁색하다. 이명박 정부가 집회 원천 봉쇄로도 "제2의 촛불" 공포를 떨치지 못하는 것은 경제 위기 교통전기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광범한 반감 때문이다. 한나라당 조선의원 모임 '민본21'의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정책이 부자나 기득권층을 더 대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68.8퍼센트였다.

따라서 '일할수록 빛이 늘어가'는 지긋지긋한 현실을 바꾸려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막강한 위력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 위기 교통전기에 대한 광범한 분노를 대변하는 투쟁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분노의 기름바다에 불을 당기는 구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촛불 운동 한복판에서 "미

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를 선언"한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적 지지를 얻었다. 덕분에 비조합원의 참가가 대폭 늘면서 물류 봉쇄의 위력이 커지며 승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기업주들에게 막강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예컨대, 2003년 부산항 봉쇄 파업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국 전체 물류의 80퍼센트가 막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극악한 탄압은 정부와 기업주들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이런 잠재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해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비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막으려 한다.

또한 화물연대와 공동 투쟁을 선언한 건설노조에게는 부분적 양보를 제공했다. 두 투쟁의 결합을 막으려는 교육지책이 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5월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보여 준 절박함과 투지를 6월 11일부터 분출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정부 여당 지지도가 폭락한 지금이야말로 투쟁에 돌입할 적기다. 물류를 마비시키는 단호한 행동과 촛불들의 지지 속에 승리했던 2008년의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민주노총과 운수노조는 대체 운송 거부 등 강력한 연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이명박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해고하는 것(노동유연성)이 국정 최대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부자 대통령의 이 소신은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78명의 해고와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낳았고, 2천4백여 명의 쌍용차 노동자, 5천1백15명의 철도노동자 감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교통전기의 칼바람을 살갓으로 느끼고 있는 화물연대, 쌍

용차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부자들의 대변자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주의 광고에 의존하는 개혁신원들도 기껏해야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언론도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고무하고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레프트21〉은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편에서 투쟁을 고무·지지하고 또 날로 악랄해지는 탄압에 맞선 방어운동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신문 〈레프트21〉이 더 많이 보급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레프트21〉의 후원회원이 돼 주십시오.

후원 관련 문의는 02-777-2792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www.left21.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